

연구총서 01-30

•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조 민

통 일 연 구 원

남북한 체제통합의 이념적 지평은 소유 패턴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철학적 사고와 실천적 전략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남북한은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토론과 대화 및 협상을 거쳐서 서로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 I. 서론

통일한국의 이념의 모색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저항과 소외를 극복하고 통일의 진통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을 효율적이고 질서있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과제는 민족사의 향방과 관련된 새로운 이념 및 가치관의 창출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 체제통합의 이념적 지평은 소유 패턴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철학적 사고와 실천적 전략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만인소유제의 확립은 광범하게 분산된 소유형태로, 이는 인간의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는 더 이상 자본시장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는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확신에 기인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창출을 남북한 통합의 이념적 기저로 삼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사적 소유의 철폐에 의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유권의 주체로 참가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 II. 이념통합의 유형

남북한 이념 통합의 유형은 크게 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① 특정 이념의 일방적·강제적 적용이 있다. ② 상호대립적인 두 이념체계의 절충적 형태를 발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③ 새로운 이념의 모색을 추구해 볼 수 있다. 이 세 방안을 시나리오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자본주의체제의 남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공적·사적 부문에서의 규범, 가치체계, 생활방식 등을 북한지역에 일방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상이한 이념과 가치체계가 고착된 분단상황에서 대립적인 두 가치체계의 단순 종합이나 상호 보완은 현실적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남북한은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토론과 대화 및 협상을 거쳐서 서로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체제 및 이념 통합을 향한 상호 양보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소유구조의 대안과 함께, 민족사의 고유한 경험에 의한 역사적 상상력을 접맥시킴으로써 남북한 이념 통합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다.

## III. 사회민주주의: 남북한 이념통합의 가교(架橋)

### 1.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신보수주의, 신제국주의의 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이념으로 국가의 질서유지 역할만 인정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새로운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토대를 잠식하고 있다. 새로운 개인주의는 시민사회의 미약한 연대성마저 크게 약화시켰다. 더 이상 시장과 공공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재하는 일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인간 본질을 경쟁으로 보는 시각, 시장공급, 개인주의, 부의 재분배를 지향하는 누진세에 대한 혐오,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신자유주의적 가치들이다. 시장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금융시장의 지배 아래 특정 국가가 편입될 경우,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 2. 사회민주주의 및 복지국가의 역할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교섭의 자유, 기회균등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연대 등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이념통합의 방향으로 중도적 입장에서 사민주의와 ‘복지사회’의 이념을 한국적 문맥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제 이념의 모순을 지양하고자 했던 서구사회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마저 완전 몰락했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많은 유보조항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남북한 이념통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민주의의 가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성공의 신화도 본질적으로 보호주의적 배경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방이나 세계화가 반드시 국가 차원의 기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세계경제를 사민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 이념 변질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민주의 이념에 대한 도전 즉, 복지국가의 위기는 국내제도가 광범한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해결책을 추진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방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삼균주의: 남북한 이념통합의 준거(準據)

우리 역사에서 조화적 평등관이 제대로 구현된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추구된 평등 관념은 균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사회상을 반추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빈곤의 시대에 이미 체계적이고 정책지향적인 균산(均産)·균분(均分)사상으로 제시된 삼균주의(三均主義)는 남북한 이념통합의 준거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사상이다.

삼균주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모순점을 뚜렷이 인식하고, 그것의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종합의 조화점을 찾으려 했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다. 재산소유권 문제, 계급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당제도의 장·단점 등을 고찰한 독창적 사상체계로 발전된 삼균주의는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나아가 해방후 독립국가의 실천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삼균주의는 서구사회의 사민주의 이념 및 정책적 지향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조화로서 제시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 IV. 이념통합의 방향( I )

### 1. 사회적 시장경제: 성과 및 전망

사회적 시장경제는 ‘효율성’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이중적 가치를 지향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국가는 능동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정의와 사회보장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 이는 능동적인 소득정책과 재분배정책을 필요로 하고 사회보장체계의 조성에서는 보충성의 기본 원리를 지향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목표는 경쟁질서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이니셔티브를 바로 시장경제적 실적을 통해서 보장하는 사회적 진보와 결합시키는데 있다. 이는 경쟁이론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통합공식으로, ‘시장, 국가, 사회집단이라는 생활영역 사이의’ 조정을 추구한다. 시장이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기초이지만, 시장에서의 조율이 실패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며, 국가 개입의 방향은 시장정합성의 지향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 헌법 경제조항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은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에 접맥되어 있다. 헌법 경제조항(제119조~제127조)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의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질서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의 구상은 경제질서를 의식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구상과 구별된다. 경쟁질서의 구성원리로서 화폐가치의 안정, 자유로운 시장진입의 보장, 사유재산의 보장, 충분한 책임과 계약의 자유원리의 도입,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했다. 나아가 질서자유주의는 국가의 독점통제, 국가의 재분배정책에 의한 소득분배의 교정, 비정상적인 시장반응과 외부효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규제원리로 삼는다.

독일모델로 구현되는 경제철학인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기본적인 인권이 아닌 법적·사회적인 산물로 간주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탈규제가 낳은 자연스런 해방상태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올바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미묘하고도 복합적인 제도로 이해한다. 즉, 시장경제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민주적인 국가 등과 같은 중심적인 제도가 확정된 것에 다름 아니다.

### 3.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계획/시장 문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체제적 성격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은 시장이 사회주의 국가의 거시조절 하에서 자원 분배 과정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하며, 경제 활동을 가치법칙의 요구와 수요·공급 관계의 변화에 따르게 한다는 데에 있다. 가격수단과 경제제도의 기능을 통해 자원을 효율이 높은 순환과정에 분배될 수 있게 하고 기업에 압력과 동력을 주어 적자생존을 실현한다. 이를테면 시장이 각종 경제신호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점을 활용하여 공급과 소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 V. 이념통합의 방향(Ⅱ)

### 1. 공동체주의의 이념

공동체주의는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시장자본주의가 축배의 노래 속에서 한국사회의 해체와 균열 현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삶의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윤리적·규범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로 종종 논의되어 왔으나, 공산주의(communism)와의 어원적 연관성이 크다.

공동체는 정치의 목표다. 점점 더 빈번하게 세계화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역문화, 지역환경의 공동선을 위해 설계한 정책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은 집단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나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어느 쪽에도 만족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어떠한 체제도 그것이 문화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었든, 지리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었든, 혹은 일상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되었든 사람들이 공동체의 틀 속에 편재되어 있는 연계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개인과 공동체와 시장 사이에 중첩되고 있는 도덕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2. 공산주의 없는 공동체

### 가. 종업원 지주제(ESOP)

ESOP의 이념은 모든 노동자를 자본가로 만드는 원대한 계획에서 유래한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자본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점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왜 극소수의 자본가만 만들어 내는가를 이해하는 지점이다. 경제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에 참여하고 경제적 성과의 분배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에 참가하게 되면 경영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소유권 문제야말로 경제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실천적 지표가 된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대성(connectivity)’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오늘날의 정치 및 비즈니스 분야의 까다롭고 단절된

그리고 가끔은 능력을 박탈하는 특성을 지닌 의사 결정에 인간적인 요소를 불어넣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나. 협동조합 공동체

공동체의 원리와 논리적 구조는 소유권 문제와 본질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사회주의는 국가소유의 비효율성과 노동소외의 결과 역사적으로 실패한 실험이 되고 말았다면,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의 집중과 불평등 현상의 심화에 따른 부정의 및 사회적 해체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모색은 두 방향에서 추구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지배적 소유양식인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끊임없이 사회화하고 개선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적인 공동체적 소유관계의 확대·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적 소유는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에 근거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마련한다.

#### 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 또는 공동체 논리는 '집단 속에 매몰된 개인'과 '공동체 없는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적 주체사상에 의해 개인 즉, 자아는 집단=전체 속에 매몰되어버렸다면, 남한의 시장절대주의의 신화 속에서 원자화된 개인주의에 의해 공동체는 해체되고 말았다. 북한 주체사상의 집단주의 가치관과 남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의 조화와 절충점의

모색은 바로 공동체주의 이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 VI. 결 론

남북한 이념 통합의 방향은 북한 사회주의와 남한 자본주의의 체제적 성격의 상호 침투 영역을 넓혀 나가는 데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소유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접점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북한의 소유권 제도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경제관리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의 접합점이 발견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의 남북한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존의 논리와 윤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질적인 것들의 공존, 사회정의와 보편적 가치의 발견과 회복을 위한 연대의 모색, 삶의 질에 대한 질문과 다중적으로 이루어진 결합망의 창출, 경제와 정치의 민주화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 그리고 한(조선)민족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대화 등을 통한 평화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목 차 -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문제 소재 .....	3
II. 이념통합의 유형 .....	6
1. 자유민주주의적 통합 .....	6
2. 남북한 이념체계의 조화 .....	8
3. 새로운 이념유형 창출 .....	10
III. 사회민주주의: 남북한 이념통합의 가교(架橋) .....	12
1.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12
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 .....	12
나. 신자유주의=민주주의의 위기 .....	16
2. 사회민주주의 및 복지국가의 역할 .....	20
가. 사회민주주의: 그래도 가야할 길 .....	20
나. 복지국가의 재확립 .....	25
3. 삼균주의: 남북한 이념통합의 준거(準據) .....	32
가. 균(均)/화(和) .....	32
나. 삼균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 .....	34
IV. 이념통합의 방향 (I) .....	37
1. 사회적 시장경제: 성과 및 전망 .....	37
가. 사회적 시장경제 .....	37
나. 자유사회주의 .....	40

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헌법 .....	44
2. 질서자유주의 .....	47
3.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	54
<b>V. 이념통합의 방향(Ⅱ)</b> .....	64
1. 공동체주의의 이념 .....	64
가. 공동체: 사회적 결속 .....	64
나. ‘사회’의 재발견 .....	66
2. 공산주의 없는 공동체 .....	71
가. 종업원 지주제 .....	73
나. 협동조합 공동체 .....	83
다.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90
<b>VI. 결 론</b> .....	97
<b>참고문헌</b> .....	100

# I. 서론

## 1. 연구 목적

21세기는 엄청난 충격과 혼돈 속에서 개막되었다. 문명사적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대변환 과정에서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나 국가적 존립 근거의 차원에서 모두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존재양식의 변화를 강요 받고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류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와 분단극복의 이중적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은 20세기적 유제를 넘겨 받은 천연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분단시대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서 통일을 지상명제로 삼아 대결적 갈등구도를 지속시켜왔다. 통일은 대개 남북한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이 하나로 통합되는 상황을 말한다.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이념 대결과 체제 경쟁을 통한 일방의 주도에 의한 통일의 달성은 비현실적인 접근임이 판명되었다. 한반도의 두 국가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형태의 통일의 전망은 높지 않다. 통일국가의 전망은 남북한 두 국가의 실체를 전제로 상호 인정과 공존의 토대 위에서 접근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존재이유와 상호체제의 인정을 위한 공존논리의 발견과 공존윤리의 모색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최근 통일 분야의 연구주제에서 한동안 방기되었던 과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남북공동선언문을 통해 나타난 통일방안의 공통성 합의는 현 단계 남북관계 발전의 질

## 2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적 수준에 조용하기 어려운 비약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통일방안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담론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사실 추상적인 통일방안의 합의는 그것의 실천적 의지를 전제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두 개의 정치적 실체의 존재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의 실천적 과제들을 제기하기 전에 남북한 각각의 국가체제의 공존과 상호인정을 암묵적으로 선언한 형태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통합의 궁극적 형태는 먼 지평에 설정하되, 변화된 세계사적 환경과 국제관계 속에서 통합 과제의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의 제시가 기대된다.

통일한국의 체제(제도)와 이념적 성격은 남북한 이념 통합의 방향과 과제 속에서 모색될 수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의 확대, 경제영역에서 상호의존성 증대, 사회영역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념과 가치체계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sup>1)</sup> 통일은 평화적 합의 통일의 원칙아래 이루어져야 하나 통일국가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적 한계와 21세기 세계사적 전망과 관련하여 현실적 개연성(plausibility)이 높은 이념적 대안을 찾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장기공존을 전제한 통일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체제 이념을

---

1) 통일과 통합은 구분된다. 통일(unification)은 서로 다른 정치적 실체(political entity) 또는 국가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정치적·국제법적 ‘사건(event)’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통합(integration)은 민족 또는 국가 내부의 다양한 구성 부문들 가운데 상호 등질적 부문간의 조화와 융합의 ‘과정(process)’을 뜻한다. 예컨대 경제통합, 제도통합, 사회통합 등을 말한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국제법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국제법적 사건으로부터 그후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 등 각 부문의 통합을 거쳐 궁극적으로 민족적 삶 자체가 하나로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모든 부문의 통합 과정을 포괄하는 하나의 총체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확인하는 작업보다는 남북한 체제와 이념의 중간영역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 이는 상당기간의 평화적 공존을 전제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민족사회의 미래를 열어 가는 우리측의 창조적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는 남북공동선언(2000. 6. 15.) 합의사항 제2항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내용과 지향점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양 방안은 두 국가체제의 장기공존을 전제한 화용(和容)과 공변(共變)을 전제한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라는 데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통일한국의 이념의 모색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저항과 소외를 극복하고 통일의 진통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을 효율적이고 질서있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과제는 민족사의 향방과 관련된 새로운 이념 및 가치관의 창출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문제 소재

소유권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열쇠 개념이다. 이데올로기 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근대사회는 소유권과 소유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소유권은 자유주의의 이념적 원형으로, 초기 자유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법적 권리 즉, 천부인권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반면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제의 철폐로부터 인간 해방의 논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사유재산은 현대 자유기업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부터 확연히 구분짓는 기본적 속성이다. 최근 사유재산 중심의 자유기업 민주주의 논리가

#### 4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득세하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나 공적 소유 관념을 주장하는 논리는 마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의 원천으로 매도되어 아카데미즘의 수준에서나 정책적 차원에서 거의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 등의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체계에 의해 촘촘히 짜여진 공동체적 결합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폐허 위에서 전개되는 현대 사회는 사유재산의 이념과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가치 속에서 유기적인 연결망을 통해 작동하던 세계는 사라졌으며,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민 사회의 결속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가마저도 해체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금융자본의 지배아래 놓인 유사민주주의(quasi-democracy)가 세계 곳곳에 확산되면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간 엄청난 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더욱더 빈곤한 상태로 몰아넣는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사적 소유가 더 이상 모든 악의 근원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유 패턴에 무관심한 시장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것이 사회주의 이념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다. 그럼에도 사유재산에 기반한 자본 철폐의 추구가 인류의 대안은 아니었다. 사적 소유의 철폐에 따른 국가적 소유는 억압과 수탈체계로부터 노동계급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소유로부터 배제되었고 국가노동자로 전락되어 자유와 인간의 개성은 철저히 거부되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사적 소유 즉, 사유재산의 부정에 해결

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안은 모든 사람이 소유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재산소유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소유에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 누구나 소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중화되고 인간적이며 지방화된 소유 패턴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 결과 공동체 지향의 경제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공산주의 없는 공동체(community without the communism)’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의존성! 이는 인간 존재의 근거로서, 모든 삶은 직접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상호의존성의 감정을 통해 인간적 유대감을 회복한다. 인간은 고립된 개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상호의존성은 소유의 대중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누구나 사회적 소유나 자유기업의 소유관계에 참여함으로써 빈곤의 타락과 모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연대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남북한 체제통합의 이념적 지평은 소유 패턴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철학적 사고와 실천적 전략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만인소유제의 확립은 광범하게 분산된 소유형태로, 이는 인간의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는 더 이상 자본시장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는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확신에 기인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창출을 남북한 통합의 이념적 기저로 삼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사적 소유의 철폐에 의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유권의 주체로 참가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 II. 이념통합의 유형

남북한 이념 통합의 방향은 크게 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이념의 일방적·강제적 적용이 있다. 둘째, 상호대립적인 두 이념체계의 절충적 형태를 발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이념의 모색을 추구해 볼 수 있다. 이 세 방안을 시나리오 형태로 유형화해 보자.

### 1. 자유민주주의적 통합

이념 통합의 방식으로 우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자본주의체제의 남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공적·사적 부문에서의 규범, 가치체계, 생활방식 등을 북한지역에 일방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가장 현실적인 이념 통합 형태로 주장되고 있다. 이 논리는 주로 경제주의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으나 대안 모색의 의지 자체가 단혀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 통합의 실천방법으로는 강제와 홍보, 엇과 채찍 등의 방법이 구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의 관리는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합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말자는 이른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데 있다.<sup>2)</sup> 전투적 민주주의는 반공을

---

2)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프랑스혁명 당시 평등, 박애의 추상적 슬로건과 함께 급진주의적 자코뱅에 의해 정치적 실천에 옮겨졌다. 자코뱅의 정

기본동력으로 삼는다. 반공주의는 자본논리를 절대적 지위에 올려놓는 자본주의 사회의 유일 신앙이자 공인사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교조주의적이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체의 이념이나 사상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중심으로 그 외연에 자리잡은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조주의적 입장은 가치절대주의에 뿌리박고 있다.

가치절대주의는 가치범주의 선형적 존재와 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가치상대주의와는 다르다. 가치절대주의는 가치의 고정불변성과 보편타당성을 논박의 여지가 없는 거의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가치절대주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확신이나 신념을 인정해주기를 거부하고 지배체제의 공식이데올로기에 무조건 귀의하기를 요구한다.<sup>3)</sup> 그에 따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고전적 형태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의 이념적 지표로 내세웠던 사상의 자유시장은 설자리를 잃고 국가권력의 인증을 받은 체제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사고는 물론 역사의 진실까지도 지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닫힌 구조의 일차원적 암흑사회가 펼쳐진다.

가치절대주의의 폐쇄성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관용의 정신이 배어들 여지를 없앤다. 여기서 보장되는 것은 반공주의 뿐, 그 밖의 다른 이념이나 사상은 품질과 관계없이 감시체제아래 놓인

---

치이념은 구체제의 복원을 지향하는 수구반동집단과 이의 잠재적 동맹군을 주된 타격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적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말라는 호전적 명제는 역사적 진보성을 함축하고 있다. 高橋幸八郎, 「시민혁명의 구조」(동녘, 1983), p. 20. 그러나 선진자본국가에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심화되었던 시기에 위기 해결의 대응논리로 등장한 전투적 민주주의는 반공을 기본동력으로 삼고, 억압과 배제를 기본속성으로 하는 체제방어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3) 原秀男, 「價値相對主義法哲學の研究」(勁草書房, 1979), p. 61.

## 8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다. 반공주의가 가치절대주의에 입각하여 체제이데올로기로 군림하는 한 비판이념이나 비판사상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은 고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거행되는 공식적인 국가의식, 달리 말해 체제유지를 위한 살풀이굿으로 자리잡는다.<sup>4)</sup> 전투적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되면 반공주의의 흑백논리가 전사회적으로 부각된다.<sup>5)</sup>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적 측면과는 달리 뚜렷한 개념 설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적 이념과도 부합되는 절충적 이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는 분단구조 속에서 남한의 공식적인 체제이념으로 표방되고 있지만, 반공주의라는 네거티브 이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주민 전체의 합의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재구성과 특히, 우리 사회 내에서 먼저 자유 이념의 실천적 지향성에 대한 합의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 2. 남북한 이념체계의 조화

갈등적 이념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수렴이론과 ‘헤게모니적’ 조화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수렴이론은 냉전시대의 이념적 모순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체제수렴의 역사적 검증은 성공하지 못했다.<sup>6)</sup> 상이한 이념과 가치체계가 고착된 분단상황에

---

4)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관악사, 1994년 하반기) 참조.

5) 반공은 1961년 군사쿠데타 정권에 의해 국시(國是)로 규정되면서, 그 후 자유민주주의는 줄곧 반공 이념으로 구현되었다. 자유당정권의 이승만 대통령은 대공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국시’에 대한 도전으로 매도하여 최초로 국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국시와 국가정책에 대하여,” 「조선일보」, 1956. 4. 15.

6) J. A. 스펀페터의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은 상이한 대립적인 체제

서 대립적인 두 가치체계의 단순 종합이나 상호 보완은 현실적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를 조합한 국가체제의 역사적 모델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남북한은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토론과 대화 및 협상을 거쳐서 서로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수렴의 문제는 당위성 차원에서 체제와 이념의 통합을 향한 상호 양보의 논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념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는 근본적으로 상호 모순적이지만, 전(前)공산주의 국가나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가치와 제도의 원용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 모델의 장점인 평등 이념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수렴 모델을 모색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우위체제의 이념을 중심으로 열위체제의 이념을 보완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이념 통합 방식은 단순한 산술평균적인 절충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예멘통합의 사례로, 1:1 대등통합 방식은 실패로 귀결), 경쟁력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상대적 우열을 감안한 헤게모니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될 남한측의 헤게모니적 접근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이는 그람시의 혁명전략의 분석적 용어로, 여기서의 ‘헤게모니’는 지배의 대체 개념 또는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로 ‘영향력, 지도력, 동의’의 의미로 사용된다.<sup>7)</sup> 즉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자유, 평등, 사적 소유

---

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서로 동일한 모습으로 근사하게 되어 결국 동일한 모습으로 귀착한다는 이론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라는 이질적인 정치체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이성이 극복되고 체제접근의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주장이다.

7) Antonio Gramsci, Q. Hoare and G. Nowell Smith (ed. and trans.),

권, 시장경제, 자본주의 등의 개념의 수용은 북한 주민들에게 지적·도덕적 동의를 얻어내야 가능하다.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 평등, 소유권 등의 개념은 부르주아적 질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단어들로 수용되어왔기에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물리적 힘이나 경제력으로 통합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정치적 지도력 및 지적·도덕적 지도력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남한 사회의 중심적 가치들은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수용될 때 헤게모니적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아래 다양한 이념적 변용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동의와 설득에 기반한 통합방식이라는 점에서 통합 추진 주체의 권위적 대안 제시에 북한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새로운 이념유형 창출

새로운 이데올로기나 통일한국의 이념유형을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인간의 도덕성과 전혀 무관한 금융자본의 활동 무대인 자본시장의 파괴적 속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세계사적 도전과 민족사적 특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을 남북한 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면, 분단 민족인 우리에게 인류사적 사명이 부여되고 있는 셈이다.

모든 인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가진 자의 자유만이 보장되는 자유주의의 한계는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평등은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지만, 평등 없이는 안정도 없다. 사회적 정의의 개선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 못하며, 우리 사회도 불안할 것이

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수용하기보다 인간성을 변화시켜 사회 정의를 이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바로 그 점이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 노동이 올바른 삶을 위한 자세이기도 한 것처럼, 인간의 소유욕을 부정하지 않는 올바른 소유(right ownership)는 사회 정의의 토대가 된다.

소유구조 대안은 남북한 통합과 관련하여 분명 새로운 이념이다. 이는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이 더 이상 집중된 자본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 소유권 개념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연대성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소유권의 개선을 통해 자본주의를 인간 공동체의 논리에 적합한 제도로 개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소유자화(ownerization)는 임노동자 또는 국가노동자 형태의 소외가 아닌 모든 의사 결정과정의 주체가 되는 길이다. 사람들은 경제시스템에서 그 체제가 함축한 권리 및 의무와 함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체제를 옹호하는 보다 나은 청지기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근로자)소유 철학은 분명 새로운 이념이다. 노동자소유 철학은 남한 사회에서는 세계적 금융자본의 충격을 극복하고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소유 철학의 정책적 접근인 소유권 리엔지니어링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좋은 반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소유구조의 대안과 함께, 민족사의 고유한 경험에 의한 역사적 상상력을 접맥시킴으로써 남북한 이념 통합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는 물론 상호보완적이다. 체제와 이념의 통합은 동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호의존적이고 포용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창조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 Ⅲ. 사회민주주의: 남북한 이념통합의 가교(架橋)

#### 1.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

우리는 흔히 현대는 이념의 빈곤시대라고 말한다. 인류사에서 2세기에 걸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근대 이데올로기는 ‘지금, 여기서’의 유토피아를 약속했다. 전인류적 이익을 위한 길에 함께 하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는 ‘그들’ 즉, 과도한 우(友)·적(敵) 개념에 기반한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보에 관한 낙관적 신념은 열정적인 인간 행동을 유발시켰다. 이데올로기는 산업화 과정의 산물이자, 산업화 자체를 추동시키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높은 희망의 시대인 동시에 어두운 환멸의 시대였다.<sup>8)</sup>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적어도 서구사회에서는 냉전시대에 이미 유토피아적 이상의 추구이라는 목표에서는 그 생생한 활력을 잃었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의 ‘정치사상의 소진’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 1960)」이 출간되었을 무렵에 실제로 이데올로기가 쇠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토의되지 못했다. 1960대 말 서구를 휩쓴 이른바 ‘68혁명’의 열정 속에서 마치 이데올로기 종언의 명제는 허위인 것처럼 판명되었다. 그 후 1980년대의 서구사회는 실제로 이데올로기의 빈곤 시대를 맞이했

---

8) Frederick Mundell Wakins, *The Age of Ideology: Political Thought, 1750 to the Pres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p. 15.

다. 서구사회는 물질적 풍요, 복지와 안전, 그리고 자유를 구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보호적 가치의 측면에서 국가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구이기 때문에 욕구에 충동된 필요는 한계도 없고 끝도 없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욕구와 필요의 순환관계만 남게되었다. 이런 과정에 따라 서구의 이상은 활력을 잃고 희석됨으로써 정치사상이나 이념적 가치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sup>9)</sup>

한반도 특히, 남한 사회에서 지난 1980년대의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분출된 이데올로기적 열정은 선진 서구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후 사회주의권의 개방·개혁을 통한 체제 내적 모순과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 사회운동의 확고한 이념적 지향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90년대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동서독 통합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의 열정이 급격히 상실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제3세계의 사회변혁의 가능성이 닫힌 가운데 과거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적 이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모더니즘을 둘러싼 정치적 신념의 폭발적 분출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전공산주의 국가의 자본주의체제로의 급속한 체제전환과 자유시장 이념의 환호가 휩쓸었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수십년전에 벨이 예언했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마치 그때서야 실현된 듯 했으며,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좌우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정치투쟁의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다. 비록 공동체의 구성논리와 사회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견 차이와 갈등 현상은 없을 수가 없겠지만 유토피아적 이념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

9) Giovanni Sartori,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p. 491.

그러나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시대는 이념의 빈곤시대라기보다는, 사실 전지구적으로 유일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쟁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신보수주의, 신제국주의의 세 얼굴을 가지고 있다.<sup>10)</sup> 신자유주의는 영국 대처 수상의 고문을 지냈던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같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이념이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단지 국가의 질서유지 역할만 인정했다. 그들은 민간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있어서 자유로울수록 GNP도 성장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복지도 증대된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1980년대부터 ‘자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아주 넓은 전선에 걸쳐서 국가통제와 국가개입의 권한을 철폐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교역상대국들에 대해서는 무역봉쇄 및 다른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이 노선을 따르도록 강제했다.

탈규제화, 자유와, 민영화. 이 세 가지 흐름의 신자유주의 강령은 미국 중심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고양되면서 경제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되었다. 워싱턴과 런던에서 정권을 장악한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서 가능한 질서원리들 중에 최상의 질서라고 선언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의 확장은 오로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으며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국제자본거래 및 외환거래의 완전한 자유방임과 더불어 노조나 야당 등 비판세력으로부터 이렇다할 저항도 없이 여태껏 비교적 공고했던 서방 민주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침탈이 이루어졌다. 금융자본 중심의 자본

10)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편역,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주운동」 (한울, 1998) 참조.

시장의 비상한 능력은 극소수의 수중에로의 부의 집중 현상을 초래했다. 예컨대 세계 20대 갑부의 순자산은 1999년까지 4년만에 두 배로 증가하여 1조 달러가 넘어섰으며, 이는 평균 1인당 50억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다.<sup>11)</sup> 그들의 총 재산은 현재 세계의 극빈자 25억 명의 총 연간 소득과 맞먹는다.<sup>12)</sup> 세계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30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13억 명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20억 명은 빈혈로 고통받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의 용단폭격과 같은 침탈에 EU 국가들도 자체 방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계층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1980년대부터 유럽사회는 <3분의 2 사회>가 아니라, <20 대 80의 사회(또는 <5분의 1 사회>)>로 변질되면서 사회로부터 배척된 80%의 사람들은 저속한 오락물과 싸구려 먹거리에 만족하면서 조용히 살아야만 하는 삶으로 전락했다.<sup>14)</sup> 그러나 유럽 사회의 고통에 비해 비서구지역의 제3세계는 거의 초토화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졌다.<sup>15)</sup>

신자유주의는 시장자유주의로, 세계의 모든 국경을 뛰어넘어 자유로이 활동하는 자본운동이야말로 자본 증식이나 자본 배분에 있어 가장 최적 상황을 보장해 준다는 논리다.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말은 신성한 지위를 지닌다. 금융자본은 가장 높은 이윤이 나올 만한 곳에 투자된다면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운동하는 금융시장은 세계시민들의 보편적인 복리의 원천이

11) UNDP,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12) UNDP,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1998*, p. 30.

13) UNDP,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p. 3.

14)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덧」(영림카디널, 1997), p. 28.

15) 유엔개발연구소(UNRISD), 조용환 옮김, 「벌거벗은 나라들: 세계화가 남긴 것」(한송, 1996) 참조.

며 또한 세계적인 경제의 합리성의 수호자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그와 결부되어 있는 정치적인 위험성을 교묘하게 은폐시킨다. 민족국가는 세계적인 금융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묶이게 되면 낮은 세금, 노동통제, 자율적인 경제정책 수립의 포기 등의 앞뒤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정치적 양보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극소수의 관심사를 항상 전체 사회의 공익과 일치한다는 그릇된 신념을 유포할 뿐만 아니라 강요하기까지 한다.

#### 나. 신자유주의=민주주의의 위기

시장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친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어느 면에서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경제적 자유 확보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자유는 사유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개인적 자유를 의미했으며,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에 필수적인 이윤동기의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게 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장은 민주주의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양자의 친화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논거가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민주주의 체제를 낳는다는 논리는 후발 자본주의국가나 근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시장경제 속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을 목격했던 경험적 사례들로 인해 오히려 시장과 민주주의와의 비대칭적 관계가 부각되는 점도 있다.

반면 본질적으로 시장 자체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양자의 긴장관계를 강조하는 입

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제도적 장애물은 사기업의 자율성이다”<sup>16)</sup>는 지적에서 보듯이,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순기능적 조화에 대한 강한 불신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과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조직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체계이다. 민주주의가 ‘1인 1표’라는 평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면, 시장은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비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1원 1표’라는 불평등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민주주의는 병행발전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반드시 배타적이거나 공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자의 공존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시장에 대한 회의 즉, 사적 이해관계의 총합적 메커니즘인 시장의 한계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났다. 폴라니(Karl Polanyi)는 인간의 이기적 행위의 총합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가정을 부정한다. 그는 일찍이 자기조정적 시장이란 허구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자 탐욕과 이윤 추구적인 가치만을 제외한 모든 인간 욕구는 무시되고 사회는 원자로 가차없이 분쇄되기 시작했다.<sup>18)</sup> 이 경우 시장은 사회와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간은 시장을 넘어 사회를 발견해야 하며 시장이라는 유토피아를 폐기함으로써 참된 자유시대의 개막을 맞이할

16) Charles Lindblom, *Politics and Markets* (New York: Basic Books, 1977) p. 356.

17) 임혁백,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 「시장·국가·민주주의」(나남출판, 1994), pp. 299~303.

18) 칼 폴라니, 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민음사, 1991), p. 51.

수 있다. 그는 자유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시장의 신화가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에는 좋은 자유와 나쁜 자유가 있다. 공공성과 책임을 기초로 하는 자유만이 가치있는 자유라 할 수 있다.

공공성을 위한 규제와 통제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만인을 위해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오염된 특권의 부속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협소한 한계를 훨씬 초월해서 사회조직 그 자체의 본질에 미치고 있는 법적 권리로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화와 규제를 자유의 부정이라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기업과 사적 소유가 자유의 본질로 선언된다. 따라서 규제가 창출하는 자유는 비자유라고 비난받는다. 즉, 규제가 제공하는 정의, 자유 및 복지는 노예제의 위장이라고 매도당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의 왕국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수단이 목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계획화, 규제, 통제를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그들이 약속한 자유를 한번도 허용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비판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자에게 자유라는 개념은 단지 자유기업의 옹호로 퇴행한다.

사회가 경제에 종속될 때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는 불가능해진다. 근대 프랑스의 사회계약사상가 루소(J. J. Rousseau)는 시민적 이익과 공동체의 공익이 일치할 때 일반의사가 구현된다고 보았다. 사적 이윤만이 횡행하는 시장논리에 매몰된다면 공민의식을 지닌 건전한 시민(citoyen)은 사라지고 오로지 시장적 인간 즉, 부르주아지만 남게 된다. 물신숭배와 이윤추구를 존재이유로 삼는 시장적 인간들의 세계에서 공동체의 발견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자원 할당이 전적으로, 전혀 제한받지 않는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상태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거의 신학에 가까운 신념을 지니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새로운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토대를 잠식하고 있다. 새로운 개인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미약한 연대성마저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더 이상 시장과 공공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재하는 일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인간 본질을 경쟁으로 보는 시각, 시장공급, 개인주의, 부의 재분배를 지향하는 누진세에 대한 혐오,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신자유주의적 가치들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난 세기말의 유령인 신자유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주술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되기 어려운 협연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시장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금융시장의 지배 아래 특정 국가가 편입될 경우,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금융자본의 세계관에 빠져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시장자유주의자들, 정치가, 경제관료들은 기꺼이 금융투자자들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처한다. 그리하여 서구사회의 경우 과거에 계급투쟁이나 개혁정책을 통하여 어렵사리 획득했던 사회복지체계 등의 역사적 쟁취물을 금융자본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린다. 바로 여기에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딜레마가 놓여 있다.

남북한 이념 통합의 방향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모색과 함께 지금까지 서구사회에서 반세기 동안이나 체제적 정당성과 사회적 연대의 틀을 제공해왔던 사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의 재인식을 토대로 사민주의와 복지국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족의 분단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에 일찍이 해방된 조국의 건국이념으로 제시되었던 「대한민국의 건국강령」 등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자의 어느 쪽

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노선에 입각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도노선의 성격은 단순한 절충적 형태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건국이념으로서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적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각각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와 서구식 자본주의가 이식(移植)되면서 상호 수렴될 수 있는 공존영역과 중도노선을 거부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념 통합이 방향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중도노선의 가치 및 현실적 변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 2. 사회민주주의 및 복지국가의 역할

### 가. 사회민주주의: 그래도 가야할 길

21세기 오늘날의 세계는 정치적 이상주의에 대한 꿈과 열정을 상실한 시대이다. 이미 인류애적 영감과 정치적 활력을 불어넣는 이념의 빛은 바랜지 오래며, 정치적 신념과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따른 좌우파의 구별은 무의미해졌다. 근대 이데올로기시대 이래 좌파는 항상 사회주의와 연계되어 왔으나, 사적 소유의 부정과 경제관리체제로서 사회주의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철학의 근본 오류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전제한데 기인한다. 인간은 정신적·도덕적 가치보다 물질적·세속적 가치를 선호하는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주의는 흔히 사회주의의 우파로 간주되어왔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에서 벗어난 서구형 사회주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서구 사회주의자들은 2차 대전 후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적 사회주의와 구

별하기 위해 스스로를 한때 ‘민주사회주의’로 불렀다. 사회민주주의에서 ‘사회적’이란 법적·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민주사회주의에서의 ‘민주적’이란 비민주적인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와 스스로를 구별하는데 초점이 있었다.<sup>19)</sup>

서구사회의 보통 시민들은 사회주의를 어떠한 정치적 가치로 받아들였을까? 1950년대 영국노동당의 조사교육기관인 사회주의연맹(Socialist Union)에서 밝힌 <사회주의의 목적>은 서구사회의 일반 대중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훌륭한 문건이다. 사회주의연맹은 사회주의의 기본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1951년에 조직된 소수의 지식인 단체로 그 회원은 영국노동당의 고위 지도층이 아니라 각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평당원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연맹의 사회주의관이 곧 영국노동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당의 이념과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영국노동당원의 출신배경은 정치가, 노조원, 귀족, 중산층, 지식인 등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신분과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과 지향성이 무엇인지 뚜렷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영국적 사회주의의 성격은 철저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편, 현실적이며 점진주의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특히 윤리적 신조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라는 점이 주목된다.<sup>20)</sup>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의 근거에는 항상 가치의 싸움이 있었다. 자본주의자는 진보의 주된 기준을 물질적 가치라고 생각해왔다. 사회주의자가 경제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19) 양호민, “사회민주주의의 원류와 발전,” 양호민 편, 「사회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pp. 5~6.

20) Socialist Union, *The Ends in View, Twentieth Century Socialism* (Penguin Book, 1956).

평등, 자유, 동포애 등 인간의 보편적 이상이였다. 이러한 이상은 모두 그 나름의 방법을 갖고 인격의 기본적 가치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을 선한 사회의 척도로 삼고 있다. 사회주의자가 선택하여 이룩하려고 해온 목적은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평등 그리고 동포애다.... 사회주의는 평등에 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유에 관한 문제다. 우리가 회구하는 평등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에 의거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바로 그 말은 자유에 의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기회는 자유, 즉 선택의 자유와 자기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찬스를 뜻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주의자는 자유를 극소수의 독점이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바라왔다.

<사회주의의 목적>에서 사회주의 이상을 결코 낙관론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의연한 사회주의적 신조를 뚜렷이 표명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평등, 자유, 동포애의 실현이라는 윤리적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후에도 사회주의는 한결 같이 “자유, 평등, 공동체, 동포애, 사회정의, 무계급사회, 협동, 진보, 평화, 번영, 풍요, 행복 등 가치를 대표한다”고 말해져 왔으며, 사회주의가 부정어법으로 표현될 경우에는 “억압, 착취, 불평등, 투쟁, 전쟁, 부정의, 빈곤, 비참함과 비인간화에의 반대” 등의 관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었다.<sup>21)</sup> 그런데 사회주의가 이와 같이 마치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인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펀페터가 아예 사회주의가 너무 문화적으로 비결정적이어서 경제적인 용어로밖에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이해된다.<sup>22)</sup>

21) R. N. Berki, *Socialism* (London: Dent, 1987), p. 9.

22)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사회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사민당 정권, 사회내 조직으로서의 노조와의 관계, 국가정책의 사회적 기반과 제도화 과정, 계급정치로서의 사민주의 등을 포괄하는 이념으로 사민주의의 대두 당시에는 ‘제3의 길’로 칭해졌다. 개인주의와 기업활동의 자유로 상징되는 자유시장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우파적 세계질서를 대변하고 있었다면, 경제의 중앙계획과 국가적 통제체제인 좌파 전체주의체제가 소련을 중심으로 또 다른 축을 형성했던 냉전체제 아래서 서유럽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자유시장 이념에 기반한 시장근본주의와 통제적 계획경제체제의 양극을 지양한 사회민주주의체제와 복지국가 이념을 오랫동안 구현해왔다. 이러한 사민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은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를 지양한 절충적 형태로 나타났으나,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의해 사민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적 위기가 대두되었다. 최근 영국노동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3의 길’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새로워진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의 틀인 동시에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되고 있다.<sup>23)</sup>

중도 좌파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최근 유럽연합(EU) 15개국 중 12개국에서 집권하고 있으며, 동유럽에서도 현저히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1990년대 이래 EU 국가들 사이엔 좌우파 이념의 뒤섞임 상태인 이른바, 이념의 퓨전(fusion of ideologies)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는 전후 유럽사회를 풍미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에 함축된 타협적·절충적 성격의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교섭의 자유, 기회균등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연대

---

Allen & Unwin, 1987), pp. 170~171.

23)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생각의 나무, 1998), p. 29.

등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는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이념 통합의 방향으로는 중도적 입장에서 사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의 이념을 한국적 문맥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다. 김정일은 ‘제3의 길’을 부르짖는 사회민주주의의 반동성과 허황성은 이미 역사에 의하여 여지 없이 폭로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구의 어느 한 곳에도 ‘제3의 길’에 의한 복지사회를 실현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사회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란 다름 아닌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이며 거기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오늘 세계에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이 두 길밖에 없으며 ‘제3의 길’이란 있을 수 없고,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 길이란 자본주의 길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즉, 현대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의 길을 열어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은 스웨덴식 사민주주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중심의 중앙계획경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당의 이념으로 구현된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동구의 사회주의체제는 몰락했다. 그와 함께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사민주주의의 위기는 제국주의의 포위 압살에 의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내적 모순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사민주의 이념에 기반한 복지국가체제의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말하자면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안락의 시대에 붕괴의 그림자를 짊어 드리웠다. 그럼에도 현실사회주의가 역사 속으로 퇴장하면서 사

24)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 5. 30., 「김정일선집」 10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회주의의 목적 즉, 사회주의가 지향했던 이념적 가치마저 완전히 사라졌는가 라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제 이념의 모순을 지양하고자 했던 서구사회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마저 완전 몰락했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많은 유보조항을 필요로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연대성을 강조한다. 모든 계층의 자유를 도덕적 기초로 삼는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개별적 취약성에 대한 휴머니즘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간 본성의 공동체성과 사회성에 기반한 연대적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점에서 남북한 이념 통합의 방향으로 검토될 가치가 있다.

#### 나. 복지국가의 재확립

사민주의의 시대는 갔는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는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추세인가? 오늘날 ‘제3의 길’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민주의의 위기는 크게 세 차원에서 파악된다. 첫째는 세계경제의 문제이며, 둘째는 재분배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복지국가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라면, 셋째는 기본적으로 사민주의에 대한 정치적 합의 구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사민주의의 위기로 세계경제의 차원에서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전지구적 차원의 단일화된 시장자본주의의 충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 국가의 성장은 경제적 개방성을 요구하며, 이는 무한경쟁과 국경을 넘는 국제무역으로 인해 재정과 자본이동에 대한 취약성에 노출된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개별 국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받는다. 이런 점에서 국민국가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역할을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고용 유지와 재분배적인 목적 추구를 위해

지출되는 재정적자는 처벌받게 된다. 이 경우 사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케인즈주의도 더 이상 선택하기 어려운 정책이 되고 만다.

개방체제 자체를 국가의 역할과 케인즈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전후 사민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전형을 보여 주었던 스칸디나비아와 독일은 가장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했으며, 반면에 미국과 호주처럼 보다 잔여적인 복지국가들은 비교적 내국 보호주의적인 경제를 운영해왔다. 앤더슨(Gösta Esping Andersen)은 오늘날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성공의 신화도 본질적으로 보호주의적 배경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방이나 세계화가 반드시 국가 차원의 기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경제 자체를 사민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 이념 변질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민주의 이념에 대한 도전 즉, 복지국가의 위기는 국내제도가 광범한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해결책을 추진하였는가 아닌가 하는 방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5)</sup>

금세기 세계경제의 모순은 분명 과거 냉전시대와는 다르다. 즉, 현재의 위기는 부유한 나라들이 과거 그들의 식민지를 더욱 쉽게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전사회주의 국가들마저 세계시장에 편입시켰다. 세계시장체제는 국민경제의 사망을 의미한다. 20세기 말의 빈곤의 세계화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빈곤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업과 전세계적인 노동비용 최소화를 기반으로 한 범세계적인 과잉생산체제의 결과다. 세계화는 민족시장을 파괴했고 공공적 권력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다.

국가는 시장의 힘에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는 또한 금융자본의 자본증식을 대변하는 세계적 규모의

25) UN 사회개발연구소·G. E. 앤더슨 편,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pp. 414~445.

금융시장의 작동에 맞서 국민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수단 역시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그에 따라 민족국가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따위의 세계적 기구들이 규정하는 바의 ‘정치·경제에 관한 일반명령’을 묵묵히 순종하고 있을 뿐이다.<sup>26)</sup> 세계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금융시장의 논리나 국제금융기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금융자본의 전지구적 활동인 ‘세계화’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렸다. 정치인의 역할은 점차 관료적 기능으로 전락하고 금융자본이 실질적인 배후의 실권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정치이념에 지배되고 있거나, 또는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정치세력들간에는 거시경제적 개혁노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 금융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곧장 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다국적기업들과 국제금융세력을 타깃으로 사회운동과 민중조직이 국내외 연대를 강화하여 이 같은 파괴적인 경제모델을 통해서 천문학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세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sup>27)</sup> 마침 거대 금융군단에 대한 ‘난쟁이’들의 저항으로, G8 국가 수뇌들이 세계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수회의 개최지인 제노바에서 “세계를 파는 물건으로 여기지 말라”는 반세계화 시위대의 비판은 국제여론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sup>28)</sup> 이러한 반세계화 시위대에 대한 금융자본 하수인

26) 이냐시오 라모네(Ignacio Ramonet), “전체주의인 지구촌 체제에 관하여,” 「르몽드 디벨로마띠끄」(1997. 1.),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편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한울, 1998), p. 51.

27) 개릿 아피 리처드·이대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지역간 연대를 넘어 세계적 민중연대로,” 「당대비평」 4 (1998 여름) 참조.

들의 숨바꼭질 대책도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지만,<sup>29)</sup> 이러한 비판 행동과 더불어 세계자본주의의 수정을 요구하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제5부’로 일컬어지는 비정부기구(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나 시민단체의 도덕적 비판과 같은 ‘시민권력’으로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시장메커니즘의 파괴적 행동을 억제하기는 힘들다.<sup>30)</sup> 전세계적으로 공공채무의 누적에 현 위기의 핵심으로 보는 입장은 이들 금융이해관계자들에 이익을 제기하는 사회적 강제를 통하여 ‘재정적 균축’<sup>31)</sup>과 같은 형태의 금융시장 개입정책과 효과적인 ‘사회적 조절’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결의 관건은 금융자산의 엄청난 집중과 실물자원의 소수지배를 푸는데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구조조정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게 강요하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경제모델이라고 비판하는 초소도프스키(Michel Chossudovsky)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사

28) 제노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 개최 전날(2002. 7. 19.) 730여 NGOs 10만명의 반세계화 시위대가 모였다. 「중앙일보」 2001. 7. 21.; 반세계화 단체가 조직한 시위대가 G8 정상회담을 축대밭으로 만든 후 세계적인 환경파괴 다국적기업들은 다음 목표로 지목하였다. *Wall Street Journal*, 2001. 7. 23.; 「중앙일보」 2001. 7. 25.

29) 2002년 G8 정상회담 로키산맥에 숨어서 개최. G8 정상회담 차기 개최국인 캐나다의 장 크레티앵 총리는 “내년 G8 정상회담은 앨버타주 로키산맥에 위치한 작은 휴양지 카나나스키스에서 6월 26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언론은 제노바 정상회담의 폭력시위에 대한 방어책으로 반세계화 시위대가 모이기 힘든 곳을 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1. 7. 24.

30) 조효제 편역, 「NGO의 시대」(창작과 비평사, 2000.); 주성수,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아르케, 2000.);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아르케, 2001) 참조.

31) Ecumenical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The Power of Global Finance,” *Third World Resurgence*, No. 56 (March 1995), p. 21.

회투쟁 없이는 의미있는 개혁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sup>32)</sup>

복지국가의 재확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는 이중적이다. 첫째 과제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윌리엄 파프(W. Pfaff)가 그 본성상 ‘무정부주의적 자본주의(nihilo-capitalism)’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세계적 자유방임주의는 단순히 역사적 진화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력이 행사됨으로써만이 자유시장주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하려면 심각한 불평등과 분배 불균형을 유발하는 그 체계적인 경향성을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홉스봄의 지적대로, 공권력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sup>33)</sup>

둘째 과제는 한국 사회의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창출한 사회적 부와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근대화 추진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제일주의 아래 산업 경쟁력과 국민총생산의 규모를 키우는데 진력해오면서 분배적 정의와 민주적 참여의 가치는 심각하게 왜곡되었거나 유보되어왔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달한다면, 복지국가의 물질적 토대로서 충분하다.<sup>34)</sup> 따라서 아직도 ‘떡’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 영원히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이념을 거부하는 입장에 불과하다.

32) 미셸 초소도프스키, 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당대, 1998), p. 30.

33) Eric Hobsbawm, “신자유주의의 죽음,” 에릭 홉스봄 외, 노대명 옮김, 「제3의 길은 없다(The Third Way is Wrong)」(당대, 1999), p. 45.

34) 1인당 1만 달러 소득은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4만 달러에 달한다. 더 많은 소득중대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제고를 통한 도덕적 사회의 기반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사회적 낭비 요소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구성원 전체의 실질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최근 세계화의 충격 속에서 서유럽 사회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미 복지국가의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서유럽의 복지국가의 이념과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복지체계의 비효율성과 모순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과 분배 불균형 문제를 시장이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복지에 대한 거부해 시장자유주의를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로,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저노믹스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후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은 정반대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영국의 대처리즘은 통화주의의 목표를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대처 정부하에서 복지지출은 더 늘어났다. 이러한 총복지지출의 증가는 복지국가로의 반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처 정부하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한층 심화된 것을 반증한다. 시장경제에서 탈락하여 소득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1979~1980년과 1988~1989년 사이에 3백만에서 4천9백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총복지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장의 자유가 평등화를 제고할 것이라는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대처리즘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sup>35)</sup> 미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국의 레이저노믹스의 결과는 10년이 넘도록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며, 인구의 11.5%에 달하는 2800만 명이 빈곤선상에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계획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회주의적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보수주의 국가론 역시 시장과 사적

35) 안병영, “신보수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의 정책비교,”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제23권 (1992), p. 109.

소유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임이 그대로 증명되고 말았다.<sup>36)</sup>

불평등과 분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역량에 달려 있다. 국민국가야말로 GNP를 수익성의 관점이 아닌 공공성의 기준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국민국가가 가장 중요한 도구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말하자면 개별 국민국가 내에서 사회적 공공성과 공익체계의 보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입장과 그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회세력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흔히 복지와 사회적 공평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비교적 공평한 소득분배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다. 서구사회의 경우, 오히려 급진자유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 동안 OECD 국가의 성장률은 케인즈주의의 황금시대보다도 더 완만해졌다. OECD 국가 산출량의 연평균 변화율은 1960~74(4.9%), 1970~90(3.2%), 1980~90(3.0%), 1990~97(2.15%)로 점점 하락추세를 보였던 것이다.<sup>37)</sup> 더욱이 특정 국가의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의 범죄율을 낮아지면, 부와 도덕성 그리고 시민공동체는 더욱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그 결과 사회에 전가되는 재정부담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20세기 후반 선진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축적 메커니즘의 한계를 복지체제 자체의 모순구조에서 찾음으로써 이른바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축적 메커니즘의 ‘위기론’은 사구 사회가 일정한 성취를 일궈낸 토대 위에서 구축된 역사적 실체로서의

36) Adam Przeworski, “Neoliberal Fallacy,” *Journal of Democracy*, Vol. 3, No. 3 (1992).

37) Robert Brenner,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No. 229 (1998), p. 262.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의 타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말 이래 자본주의 발전의 특정 국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논리였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 사회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형태마저 외면해온 한국 사회의 실정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을 내세워 복지와 사회적 공평성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은 왜곡된 가치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단언컨대 한국은 산업화 수준과 인구구성비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단계에 충분히 도달해 있다. 통일지향의 사회적 목표는 국가적 부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복지와 사회적 공평성에 두어져야 한다. 복지와 사회적 공평성 없이 국가적 부와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3. 삼균주의: 남북한 이념통합의 준거(準據)

#### 가. 균(均)/화(和)

남북한 통합의 이념적 지향은 근본적으로 체제(제도)간 상호 접근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면, 이는 사실 사회경제적 평등 관념에 대한 합의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등 문제가 정치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며,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남북한 정치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적 균열로 인한 갈등은 통합 자체를 위태롭게 하거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사회통합의 실질적 토대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통합은 한국사상의 전통적 의미에서는 ‘화(和)’의 상태를 뜻한다. ‘화’는 온화하고, 화목하고, 고르고, 따듯한 상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화’의 토대는 바로 ‘균(均)’에 있다. 그렇다면 ‘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평평하고 공평무사함을 말한다(병국지균(秉國

之均), 「시경」). 또한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고르다(균제(均齊), 「맹자」)는 뜻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사물이 가지런히 조화를 이룬 상태(육비기균(六轡既均), 「시경」)이거나, 과불급(過不及)이 없이 평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天下國家可均也,’ 「중용」). 그렇다고 하여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관계의 위계적 질서에 따른 차등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조화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자도 “부족한 것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논어」).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조화적 평등관이 제대로 구현된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추구된 평등 관념은 균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사회상을 반추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식민지, 해방, 전후의 폐허, 근대화의 진통 등의 현대사는 절대 빈곤상태에 고통받아온 시기로 한번도 물질적 부와 풍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 따라서 우선 곳간의 양식을 그득 쌓고 주린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지 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평등 관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정책적 실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시대에 이미 체계적이고 정책지향적인 균산(均産)·균분(均分)사상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무척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소앙(趙素昂, 1887~?)의 삼균주의(三均主義)는 남북한 이념통합의 준거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사상이다.<sup>38)</sup>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삼균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자.

38) 홍선희(洪善熹)는 삼균주의를 “개인간·민족간·국가간의 완전균등과 권력·부력·지력의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세계일가의 이상세계로 제시한 삼균주의는 제국주의 열강간의 쟁패로 나라를 빼앗긴 한민족의 고유한 반성 속에서 우러난 전연 새로운 정치사상”으로 평가하였다.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한길사, 1982), p. 3.

## 나. 삼균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

삼균주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모순점을 뚜렷이 인식하고, 그것의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종합의 조화점을 찾으려 했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다. 임시정부의 국무회의에서는 삼균제도를 국시로 채택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통과시켰으며(1934. 11. 18.), 그후 정식으로 공포된 「건국강령」에 반영되었다(1941. 11. 25.). 재산소유권 문제, 계급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당제도의 장·단점 등을 고찰한 독창적 사상체계로 발전된 삼균주의는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나아가 해방후 독립국가의 실천강령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해방 후에 좌·우익간 대립이 첨예화되자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민족재통일의 이념적 토대로 삼고자 했다.

삼균주의 이론체계의 최초의 모습은 <한국독립당의 근상(1931년 집필)> 가운데 ‘주의정강과 정책’ 부분에서 제시되었다.<sup>39)</sup>

...그렇다면 독립당이 표시로 내걸은 주의로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인간과 인간, 겨레와 겨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균등한 생활을 주의로 삼는다>고 할 것이다. 무엇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균등을 꾀할 것인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보선제를 실행하여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를 실행하여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로 의무학제를 실행하여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이니, 이로써 나라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균등한 생활이 실현된다.

이와 같은 삼균주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에 있으며,<sup>40)</sup> 그후 균등사상

39) 삼균학회 편, 「소앙선생문집(상)」(햇불사, 1979), p. 108.

40) 균등 사상의 단초는 이미 「대한독립선언」과 그 자신이 기초위원의

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교육의 세 부문으로 나눠 주의·정책·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삼균주의의 제도와 정책적 특성으로 첫째,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정치적 균등의 논리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적 한국 정치제도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 균등과 관련하여, 건국 헌법의 경제체제로 ‘국유와 사유’를 구분하고 있다. 즉,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육상·공중의 운송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과 성시(城市)공업구역의 공동적 주요 방산(房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등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을 천명하였다.<sup>41)</sup> 그후 국유제 사상은 해방후 조소앙이 현실정치에 참여할 무렵 토지개혁의 단행과 더불어, 중요산업의 ‘국·공영’의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up>42)</sup>

한편 「대한민국건국강령」 총강에서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주의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는 주장은 무척 흥미롭다. 그는 “선민(先民)이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고루히 함)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 나라를 일으키고 태평케 함)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계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평균하게 하며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라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理化世界: 진리로 세계를 변화시킴)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의 최고공리임”이라고 했다.<sup>43)</sup> 말하자면 ‘균’ 사상의 실천적 구현인

---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정강」(1919. 4)에 반영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국사편찬위원회, 1971), p. 2.

41) 삼균학회 편, 「소양선생문집(상)」, p. 15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 pp. 29~34.

42) 삼균학회 편, “나의 주장,” 「소양선생문집(하)」, pp. 117~118.

43) 삼균학회 편, 「소양선생문집(상)」, p. 148.

삼균주의는 유구한 민족사의 내재적 원리로 흥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공리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셋째, 「건국강령」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의 모순구조의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교육균등에 관한 논지이다. 교육균등을 위한 철저한 국비교육·의무교육을 주장한 것이 삼균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를테면 한말 이후 신교육열과 교육구국론을 계승하여 그도 국민교육을 가장 중시하였고, 대담한 교육혁명을 통해서만 삼균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는 교육 불평등이 시정되지 않는 한 정치적·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좀처럼 실현할 수 없다고 믿었다. 교육의 기회균등에 그치지 않고 국비교육·무상교육으로 지식·문화·과학기술 등의 공유화를 실현하는 데에 있으므로, 교육균등론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균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는 목적론적인 평등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평등 이념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지적 전통은 모두 평등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sup>44)</sup> 정치적 평등 이념은 사실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나타났으며, 평등의 가치가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강조됨으로써 자유와 평등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심화·확장되었던 것이다. 삼균주의는 서구사회의 사민주의 이념 및 정책적 지향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조화로서 제시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

44) Sanford A. Lakoff, *Equality in Political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pp. 1~11.

## IV. 이념통합의 방향(Ⅰ)

### 1. 사회적 시장경제: 성과 및 전망

#### 가. 사회적 시장경제

남북한 이념 통합의 방향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아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의 창조적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는 ‘효율성’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이중적 가치를 지향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국가는 능동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정의와 사회보장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 이는 능동적인 소득정책과 재분배정책을 필요로 하고, 사회보장체계의 조성에서는 보충성의 기본원리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 가족, 또는 확정가능한 사회적 단위가 합당한 조건 아래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지원을 떠맡아야 한다. 사회적 대비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자기책임으로 완비하려면 광범한 인구층의 수행가능한 재산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가 가장 유리한 토양을 제공해준다. 시장시스템 자체는 어느정도 복지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러한 시장시스템의 사회적 잠재력을 기반으로 사회정책적 틀이 완전고용, 재산형성, 노동자보호, 기업내 공동결정에서부터 영세민 지원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보장체계를 포괄한다.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은 1930년대 독일의 신자유주의 철학의 영향 아래 발전되면서, 경쟁이론 및 정책 영역에서 전후 독일모델의 토대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에는, 이 이념을 창안한 오이켄(Walter Eucken)이나 프라이부르크 학파에게 있어서도, 정치 및 경제적 권력제한 문제가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강력한 국가적 경제정책이 없는 자유방임 상태에서는 시장의 권력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개인은 특정 권력집단에 과도하게 예속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시장경제적 질서의 지속적인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경쟁질서가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의 예속, 자유의 위협 등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사회적’이란 개념은 경쟁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비예속과 더불어 독점이 없고 권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포섭은 남한 독점자본에의 예속상태와 내적 식민화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의 권력화에 대한 예속을 극복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경제기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배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전후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아래 독일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에르하르트(Ludwig Erhard)의 견해처럼 공동사회는 “사회, 경제 및 재정정책적 조치를 통해서 한계나 규칙의 제약하에 놓여야 한다”<sup>45)</sup>는 아주 명료한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목표는 경쟁질서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이니셔티브를 바로 시장경제적 실적을 통해서 보장하는 사회적 진보와 결합시키는데 있다.<sup>46)</sup> 이는 경쟁이론을 포함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통

45) L. Erhard, *Deutsche Wirtschaftspolitik* (1962), 오토 쉴레히트, 안두순 외 공역, 「사회적 시장경제」(비봉출판사, 1993), p. 36.

46) Mueller-Armack, *Soziale Marktwirtschaft* (1956).; 앞의 책, p. 27 재인용.

합공식으로, ‘시장, 국가, 사회집단이라는 생활영역 사이의’ 조정을 추구한다. 시장이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기초이지만, 시장에서의 조율이 실패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며, 국가 개입의 방향은 시장정합성의 지향에 초점을 맞춘다.

전후 독일의 경제정책은 1960년대까지 뮐러-아르막(Alfred Mueller-Armack)에 의해 발전된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의 이론적 계보는 오이켄과 에르하르트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을 들 수 있으나, 특히 뮐러-아르막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는 학문과 실제 경제정책에서 에르하르트의 동반자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자유주의의 이념을 확장시켰다. 특히 뮐러-아르막은 시장경제를 하이에크식으로 ‘자연 발생적 질서’의 발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보면서 특정한 경제유형을 위한 의도적 결정이라고 해석하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처음부터 획일적이고 공통적인 도그마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지지하는 이론가들 사이에 차별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공통적인 신념은 다만 이 체제만이 전체주의 지배의 잔재를 해소하고 개인에게 충분한 행동공간을 제공하며 독자적 재량에 의한 자기실현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파괴된 국가의 나머지 자원을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이야말로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새로운 통일국가의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확보할 수 이념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독일 역사상 사회질서

에 대한 중요하고도 의도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 가지 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 후에 내려진 분명한 결정이었다. 어쨌든 전후 독일의 이러한 질서정책적 성공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시장경제의 경제적 장점에만 그치지 않고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와 보완적이면서 경제, 사회 및 공동체적 이념 상호간을 조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현대 독일의 역사에서 평화, 자유 그리고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다.

#### 나. 자유사회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는 ‘신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불리는 ‘자유사회주의’의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 신사회주의는 서구사회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내재적 대안논리로 일정한 역사적 시기마다 주장되었다. 독일의 신사회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불세비즘에 대항하여 ‘자유사회주의’ 또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아카데미즘 영역에서 대두하였다. 전후 신사회주의 즉, 자유사회주의는 독일 시민당의 이념체계에 합류되어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적 실천에 기여했다. 자유사회주의는 사회적 목표라는 관념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서독의 경제정책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자유사회주의는 계획 및 조정질서와 관련하여 정통 사회주의 원리와 결별하였으며, 가능한 한 경쟁과 시장조정을 인정하고 국가의 계획 권한을 대체적으로 케인즈적 성격의 거시조정에 국한하고자 하는데 그쳤다.

신(자유)사회주의의 특징은 첫째, 역사결정론을 부정하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는 차별성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궁극적 목표와 실현방법 등을 거부하면서 제도적인 변혁과 도덕적 교육적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조직의 원리가 아닌 하나의 이념이

자 시대적 과제로 접근하는 한편 계급투쟁보다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선호한다. 따라서 계급정당이 아닌 대중적 국민정당을 지향하게 된다. 셋째,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경제의 전면적인 계획화를 배격한다. 경제의 전면적인 계획화는 거대한 권력집중을 야기해 거대기업에 의한 세력 행사 이상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 궁극적인 완성형태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과제를 중시하고 있다.<sup>47)</sup>

사회적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독일사민당이 바드 고데스베르크의 임시전당대회(1959. 11. 13~15.)에서 채택한 ‘독일사회민주당기본강령(Grundsatzprogramm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은 흔히 고데스베르크 강령으로 불리는데, 이는 자유와 시장경제 질서의 토대 위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서구 사민주의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문건이다. 고데스베르크 강령은 전후 스탈린의 공산독재와 히틀러의 나치즘의 극좌·극우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배격하고 철저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노선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서구사회주의운동의 이념적 전환을 가져왔던 계기가 되었다.

사민당은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국가질서> 항에서 국가는 모든 개인들이 자유로이 자기 책임에서 그리고 사회적 의무에서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 선행조건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즉, 기본권들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의 권리로써 국가의 기초를 다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사민당의 국가관은 “국가는 사회국가로서, 각 시민이 자기의 책임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성케 하고 자유로운 사회의 발전

47) 김영윤,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21~122.

을 위하여 시민에게 생존조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천명했던 것이다. 즉, 사회국가로서 시민의 생존권 보존을 국가의 의무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sup>48)</sup>

<경제-사회질서> 항의 ‘소유권과 권력’의 문제를 밝히는 부분에서 경제 집중화에 대한 제한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특히 대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민당은 대기업은 결정적으로 경제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구조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49)</sup>

거대 경제조직을 통해 수백만 금의 재화와 수만 명의 피고용자를 지배하는 자는 경제적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지배권도 행사한다. 즉, 노동자와 종업원의 예속은 경제적 물질적 영역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대기업이 위세를 떨치는 곳에서 자유경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동등한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는 동등한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며, 다소를 막론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결과 소비자로서의 인간은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대기업의 지도자들은 카르텔과 연합체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민주적 기본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끝내 국가권력을 찬탈하며, 따라서 경제적 힘은 정치적 힘이 된다.

사민당은 이와 같은 사태 발전은 자유, 인간의 가치, 정의,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인간사회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힘을 억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정책의 중심과제로, 국가와 사회가 강력한 이익집단의 희생물

48) Fritz Sanger, *Grundsatzprogramm der SPD: Kommentar* (Verlag J. H. W, Diez Nachf. GmbH. 1960).; 독일사회민주당, “독일사회민주당기본강령,” 양호민 편, 「사회민주주의」 (중로서적, 1985), p. 310.

49) 독일사회민주당, “독일사회민주당기본강령,” 앞의 책, p. 313.

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생산수단의 사유는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 한 보호와 조장(助長)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의 경제적 대립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효율적인 공공관리로 경제력의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투자관리 및 시장지배력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민당의 공유관은 사회적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데, 사민당은 공유는 현대의 어떤 국가도 포기할 수 없는 공공관리의 정통적인 한 형태임을 천명하였다. 공유는 “대경제조직의 과도한 힘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데 기여한다... 모든 경제적 힘의 집중은, 그것이 국가의 수중에로의 집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재산은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그 공유재산의 관리기구에서 노동자와 종업원의 이익은 공유의 이익 및 소비자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대표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가 아니라, 책임을 자각하는 모든 관계자의 협력이야말로 공동체에 가장 잘 봉사하는 길이다”고 하여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사적소유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소유형태의 가능성과 사회적 의의를 부각시켰다. ‘소득과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대경제체의 기업재산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경우, 증가된 재산은 적절하고도 광범하게 분산되거나 공동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50)</sup>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서독 경제질서의 기본이념으로 경쟁이론만이 아닌 통합지향적 이념으로 독일식 ‘제3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장, 국가, 사회집단이라는 생활영역들 사이의 조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진 시장경제’ 즉, 시장경제가 갖는 사회적 기

50) 독일사회민주당, “독일사회민주당기본강령,” 앞의 책, pp. 314~315.

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고전적 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단순한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와 그에 대한 비체계적인 간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하였다. 여기서의 ‘제3의 길’은 자유로운 사상과 경제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조건이 유지되는 규제된 자본주의를 지향한 것이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더불어 자유(신)사회주의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의지 형성에 대한 국민의 참가와 함께 다른 한편, 경제적 결정에서도 여러 수준의 ‘공동결정’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이념이기도 하다.

#### 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헌법

우리 헌법 경제조항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은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에 접맥되어 있다. 헌법의 경제조항 제119조 ①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제119조 ②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바탕 위에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원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민경제의 성장·안정, 공정한 소득분배 및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하여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sup>51)</sup>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의 근본원칙은 제119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4조 등 여러 규정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경제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여 기본권 및 경제질서 전체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는 사유재산권의 보장 및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룬다.<sup>52)</sup>

중요한 자원의 국유화·사회화의 원칙(헌법 제120조 ①), 그리고 국토개발·이용계획의 수립(헌법 제120조 ②) 등의 조항은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sup>53)</sup> 그외 농업부문의 경자유전의 원칙,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육성임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조정 등의 조항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26조의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 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조항은 시장경제질서 및 사유재산권 제도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은 사유화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과

51) 헌재 1998.5.28 선고, 96헌가4등 병합.

52)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들을 근거로 각종 법률에 의한 경제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소비자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53) 헌법재판소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이용·개발·보전을 위한 제한의 하나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닌 합헌임을 밝혔다. 헌재 1989.12.22. 선고, 88헌가13.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이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sup>54)</sup> 이처럼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제119조~제127조)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의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5)</sup>

남북한 통합과정은 일반적으로 세계사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북한의 위로부터의 명령경제의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전체주의적 억압체제의 완화와 동시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급속한 전환이든 혹은 점진적 전환이든 간에,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이란 국가사회주의로부터 시장자본주의로의 단순한 일방적 경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체제전환의 과정은 남북한 양 체제의 상호 변화를 동반할 수도 있으며, 남북한 통합체제의 성격은 남북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역학관계와 통합시기의 세계사적 추세 등이 반영되어 복합적이며 유동적인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주체 문제와 전환 대상으로서의 토지, 임야, 기업, 주택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 예상된다. 이는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경험되었던

54) 헌재 1993.7.29.선고, 89헌마31.

55)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나란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 및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궁극적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로, 대개의 경우 과거 공산주의체제의 정치적 엘리트계층이 체제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엘리트층으로 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sup>56)</sup> 즉, 러시아와 동구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공권력은 대개 사유화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여기서 사회정의의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고 말았다.<sup>57)</sup> 이런 점에서 남북한 통합과정은 특히 다양한 소유형태를 지향하되,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건설이라는 이념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 2. 질서자유주의

독일 모델로 구현되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른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 철학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질서자유주의는 1930년대 독일적 상황에서 새로운 자유주의로 주장된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발전되었다.<sup>58)</sup> 신자유주의의 출발점은 고전적 자유주의(구자유주의)와는 달리, 기능가능한 경쟁질서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출되는 업적’으로 파악한다. 즉, 경쟁질서는 국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조성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구상에 기반한다.

질서자유주의의 신사고를 촉발하는 계기들로는 세계경제공황, 시장의 권력화 추세, 기업집중, 전체주의적 국가형태와 이데올로기의 대두

56) 동구 국가의 미래에 대해 서방세계와의 통합이라는 꿈이 빈곤과 불안정, 그리고 주변부 자본주의로의 복귀로 파악하고 있는 글로는, 보리스 까갈리쯔끼, 유희석·전신화 옮김, 「근대화의 신기루」(창작과비평사, 2000), pp. 332~351.

57) Adam Przeworski, *Sustainabl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92.

58) 헬무트 라이폴트, “경제시스템의 사회이론적 정초,” 한닐로레 하멜 편, 안병직·김호균 옮김,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 계획경제」(아카넷, 2001), pp. 25~33.

등을 들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적 질서에 대한 자유주의의 신뢰는 동요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거꾸로 중앙에 의해 계획되고 지도되는 경제 또는 중앙관리경제는 자유주의의 기본가치, 특히 법치국가의 이념과 합치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설득력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국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자유로운 교환경제를 한편으로 하고, 중앙관리경제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극단 사이에 질서자유주의의 창시자인 오이켄의 질서관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자유무역, 영업 및 개인의 자유, 농민해방, 여타 이동의 자유에 관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일체의 공업화를 가능케 했던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회의하면서, 경제질서의 조성을 사적 이해에 맡겨두는 데에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자유에 맡겨 이해관계를 처리하는 것은 결코 생산적인 전체질서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오히려 가능한 한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려 한다. 경쟁을 제거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충동은 모든 시대에 도처에 살아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재화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나며 이 성향은 노동자의 사회적 궁핍의 본질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이켄은 여기에서 시장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오히려 기능가능한 시장형태들과 화폐질서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조건들을 갖추어 주는데 경제정책의 필요성과 목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서자유주의의 구상은 경제질서를 의식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구상과 구별된다. 경쟁질서의 구성원리로서 화폐가치의 안정, 자유로운 시장진입의 보장, 사유재산의 보장,

충분한 책임과 계약의 자유원리의 도입,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했다. 나아가 질서자유주의는 국가의 독점통제, 재분배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의 교정, 비정상적인 시장반응과 외부효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을 규제의 원리로 삼는다.<sup>59)</sup>

질서자유주의는 경제력의 정치권력화 현상을 경계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경쟁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용인되나, 집단소유 즉, 소유의 집중은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물론 사적 소유는 경쟁에 의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사적 처분권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렇다고 이 위험이 집단소유를 도입함으로써 추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집단 소유 형태에서는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결합 때문에 권력 문제가 거대한 위협요소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사적 소유는 폐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집단소유는 반드시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소유의 국유화와 중앙의 조정을 지향하는 모든 해결책은 업적유인을 약화시키고 비용계산을 어렵게 하며 경제관리의 관료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양한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전후 독일 사회에서 질서자유주의로 구현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치적 실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철학인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기본적인 인권이 아닌 법적·사회적인 산물로 간주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질서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탈규제가 낳은 자연스런 해방상태가 아니라, 시장경제는 그 자체의 올바른 모

---

59) 헬무트 라이폴트, “경제시스템의 사회이론적 정초,” 한넬로레 하멜 편, 앞의 책, p. 26.

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 개혁을 필요로 하는 미묘하고도 복합적인 제도로 이해한다. 달리 말해 질서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시장경제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민주적인 국가 등과 같은 서구사회의 중심적인 제도가 확장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sup>60)</sup>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자유주의 독일 모델은 에르하르트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했으나, 나치 기간 동안 대표적인 이론가 중 많은 사람들이 강제이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자유주의 이념은 독일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질서자유주의 철학에서 상정하는 시장경제는 현대 독일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최근 독일모델은 전후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왜 문명화되고 우수한 사회제도가 만성적인 불안정과 분열, 그리고 빈민가의 확산을 가져오는 미국식 자유시장으로 대체되어야 하는가? 물론 전후 질서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독일모델이 남북한 통합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적 대항관계가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경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세계화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거의 신앙적 차원으로 떠받들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의 모티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60) John Gray, *The Postcommunist Societies in Transition: A Social Market Perspective* (London: Social Market Foundation, 1994). reprinted as Chapter 5 of *Enlightenment's Wake* (London: Routledge, 1995).

### <경제윤리의 제도화>

사회적 시장경제는 정치경제적 이론을 공동체적 윤리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라인강의 기적을 주도한 에르하르트 밑에서 경제정책 실무자로, 40여년 동안 연방경제부의 정책입안자로서 독일 경제정책에서 질서의 기본틀을 확고히 다졌던 독일 경제사의 증인인 쉘레히트(Otto Schlecht)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야말로 자연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이해관계에 가장 적합한 경제질서라고 한다. 그는 ‘독일식 시장경제의 이론적 논리와 실무적 저력’이라는 부제를 붙인 그의 저서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윤리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경제질서의 개인적, 사회적 윤리의 측면, 양자의 상호작용으로서 기업가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발전과정에 비춰볼 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정치적·경제적인 과제들을 윤리적·도덕적인 문제들과의 통합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최근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자유시장주의는 경쟁과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정치경제학과 윤리학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여 양자의 조화롭고 통합적인 속성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런 점에서 윤리학에 토대를 둔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의 창시자들의 문제의식과 의지는 새삼 돋보인다. 여기서는 경제질서와 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사회적 시장경제는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를 조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인간다운 질서가 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시장경제의 높은 효율성은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개개인들의 지나친 도덕을 전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경제체제는 어떠한 도덕도 존재하지 않

는 영역이 아니며 개인적인 도덕을 포기할 수도 없다. 개인적인 윤리적 행동규율의 준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능을 위해 중요하며 따라서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는 상호의존 관계를 가진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덕목을 요구한다.<sup>61)</sup>

첫째, 기업가의 도덕적 책임이 중요하다. 기업가는 기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기업의 내적 및 외적인 윤리적 책임을 지닌다.

둘째, 건전한 다원주의와 병든 다원주의가 구별되어야 한다. 다원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방어적인 건전한 다원주의와 공격적이고 병든 다원주의가 그것이다. 전자는 개별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지 않는 이해관계의 형성 및 권익옹호의 형태라면, 후자는 국가를 이익단체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다원주의를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는 사회적인 다양한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에 맞서 대항하고, 공동체적 가치와 시장경제질서의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행동할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셋째, 사회보장체제와 도덕과의 관계이다. 이는 사회적 상층 계층과 소외 계층간의 연대규범, 사회적인 수혜자와 사회보장 담세자들간의 연대규범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보장체제와 재분배 시스템의 고용 함정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경계해야 한다.

넷째, 사회주의 명령경제의 도덕적 빈곤에 대한 인식이 요망된다. 강제와 국가의 감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필수불가결한 재화의 공급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체제는 그 어느 다른 체제보다도 더 많이 인간의 행동을 부패시켜, 결국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탈법상태와 도덕적 파탄 상황을 초래했다. 이 경우 공익에 헌신하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은 허구에 불과하며 기만적인 인간형이 양산된다. 권력의 부패, 신뢰의 부재, 감시제도와 비밀경찰제도 등의 개인에 대한 국가지배

61) 오토 쉐레히트, 앞의 책, p. 80.

현상은 도덕적 공동체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윤리적 덕목을 독일적 경험과의 연관 속에서 다음의 몇 가지 명제를 고려할 수 있다.<sup>62)</sup>

① 시장경제는 법적 제도적인 틀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개별적인 간섭에 의해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의 윤리적인 내용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조화를 찾을 수 있다.

② 사회적 형평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시장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은 비록 갈등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긴밀한 조화로운 상호관계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사회적 안정, 사회적 장애물의 제거, 분배정의 및 사회적 책임을 전제한 경제질서의 존재에 기인한다.

③ 경제질서,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의 상호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시장경제는 법치국가적인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④ 사회적 시장경제의 지향은 부와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제공하는 조직구상 및 조정구상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열린사회의 구상이자 동시에 다원주의적인 사회질서의 구상이기도 하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존재할 때 비로소 관용과 비차별화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소수파에게도 자기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는 평화질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으며, 독일 경제정책의 이념적 토대가 됨으로써 경제적 복지가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다시 사회보장체제를 확장하는 튼튼한 기반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후 서독의 부흥과 경제적 번영과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은 새로운 도전에 부딪혔다. 이는 복지국가의 전면적인 확대와 조직된 이익집단

62) 오토 쉘레히트, 앞의 책, pp. 86~88.

의 영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의하면 국가는 효율적인 질서의 틀을 조성하는 이외에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정책적 임무를 맡아야 한다. 국가의 주된 임무는 질서를 세우는 국가로서 기능하는 것이어야 하고 생산하는 국가, 즉 공공재의 생산자이자 재원조달자로서의 임무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후자의 기능적 측면에서 점차 국가의 임무가 확장되고 국가의 위상이 변질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sup>63)</sup> 시장경제 질서에서 국가의 질서 및 사회정책적 임무에 관한 개념적 확립은 이 경제질서를 도입할 당시 광범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수이익을 반영하는 조직된 이익집단의 정치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역동성은 사회국가 원리의 질서이론적 정초를 흐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정치과정의 새로운 현실은 국가적-정치적 행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근의 ‘민주주의의 경제이론’은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임무와 권한의 범위를 재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산업에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평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평성’을 사회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바라보는 입장은 오늘날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의 마지막 보루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21세기 중

---

63) E. Altvater, “Some Problems of State Intervention,” *Holloway and Picciotto* (1978).

국의 체제적 성격을 여전히 사회주의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고 자본주의와 다름없는 체제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성격 규명, 특히 사적 소유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또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모델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1978년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 특색’의 진로를 모색해왔다. 대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실정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길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이 된다고 주장했다.<sup>64)</sup> 말하자면 중국의 현대화 건설은 반드시 중국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중국의 현실과 구체적으로 결합시켜 자신의 길을 걸으며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기본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sup>65)</sup> 중국은 개방 정책의 실시 초기부터 서방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자산계급의 자유화’의 용인을 거부하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같지 않은 특징적인 점은 함께 부유해지고, 양극 분화를 가져오지 않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창조한 재부는 먼저 국가에 돌리고 그 다음 인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국가의 재부도 결국은 모두 인민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자산계급의 창출을 거부하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sup>66)</sup> 1980년대

64) 등소평,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1984. 6. 30.),” 김승일 옮김, 「등소평 문선(상)」(범우사, 1994), pp. 96~101.

65) 등소평,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사(1982. 9. 1.),” 「등소평 문선(상)」, p. 23.

66) 등소평, “자산계급의 자유화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1985. 5.),” 「등소평 문선(상)」, p. 179.; “자산계급의 자유화에 대한 반대기치를 선명히 하자(1986. 12. 30.),” 「등소평 문선(하)」, pp.

중반 등소평은 미국 대기업 대표단과의 대담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결부시키면 생산력을 해방할 수 있고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대외 개방과 개인경제의 발전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는 기본적 정책을 고수한다면 사회주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sup>67)</sup>

계획/시장 문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체제적 성격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채택하면서 경제제도의 측면에서 분명한 개혁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제발전과 경제개혁에 대해서 개혁개방 초기의 국유경제 중심의 소유제와 경제적 자원이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배분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비국유경제 및 시장조절기능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는 이미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계획이 주이고 시장으로 보충한다”는 결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계획’에서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 1979년 국무원 체제개혁관공실은 ‘계획있는 상품경제론(有計劃商品經濟)’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사실 이 당시의 ‘상품경제론’은 ‘시장경제론’의 구상과 유사한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이 입장은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2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면서 중국의 경제개혁은 계획경제론의 틀을 뛰어 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는 농촌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향진기업 형태의 농가경영책임제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68)</sup> 당시 농민

---

22~26.

67) 등소평,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적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1985. 10. 23.),” 「등소평 문선(상)」, pp. 211~214.

에 의해 창안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가정 단위별 농업생산 청부제의 실시와 인민공사 제도의 폐지는 농촌개혁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농촌개혁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부는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은 기업을 인도한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등소평은 1992년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의 가속화와 경제제도(사회주의/자본주의), 그리고 경제조절 수단(계획/시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즉, 계획이 더 많으나 시장이 더 많으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가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인 것도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일종의 경제수단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착취를 없애고 양극 분화를 없애며 결국에는 함께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69)</sup> 그리하여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채택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은 시장이 사회주의 국가의 거시조절 하에서 자원 분배 과정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하며, 경제활동을 가치 법칙의 요구와 수요·공급 관계의 변화에 따르게 한다는 데에 있다. 가격수단과 경제제도의 기능을 통해 자원을 효율이 높은 순환과정에 분배될 수 있게 하고 기업에 압력과 동력을 주어 적자생존을 실현한다. 이를테면 시장이 각종 경제신호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점을 활용하여

68) 김형모, “중국의 농촌공업화(향진기업)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8호 (1997), pp. 289~317.

69) 등소평, “무창, 심천, 주해, 상해 등지에서의 담화 요점(1992. 1. 18.~2. 21.),” 「등소평 문선(하)」, p. 249.

공급과 소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sup>70)</sup> 따라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역사상 초유의 결합을 선언했던 것이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산요소 시장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업개혁과 자본시장의 육성이다. 초기 기업개혁은 소유구조의 개조보다는 비국유경제(집체, 사영, 외자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유기업 경영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후 국유기업의 개조방향의 문제는 1997년 제15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서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조”라는 모토 아래 국유기업 비중의 축소와 소유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육성이 제안되었다. 국가는 국유기업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필요가 없으며 화폐형태로 소유하여 국유자산의 증식을 중요 목표로 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제도의 도입과 주식시장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보수는 당연히 국유기업을 화폐형태로만 소유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국가와 생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반대하였으나, 제15차 당대회에서는 주식회사제도를 현대적 대규모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에 적합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유리한 기업조직 형태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사유 문제에 대한 중국 특색의 해결책은 본질적인 논쟁이 유보된 채, 경제의 작동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차이가 점차 모호해지는 형태로 나타났다.<sup>71)</sup>

중국공산당이 천명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과연 사회주의적인가, 자본주의적인가?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

70)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www.peopledaily.com.cn).

71) 이남주, “중국사회주의의 진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과제들,” 「이론과 실천」(민주노동당, 2001. 8.).

당인가 하는 문제가 새삼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이는 소유권의 문제로 사회주의의 핵심인 공유제의 원칙이 이념적 차원에서 또는 실질적 측면에서 고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공유제의 원칙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사회공평”이라는 등식화를 통해 사회주의의 원리적 이념에서 소유제의 속성을 폐기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영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사회주의의 공유제 중심 논리도 차츰 희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로, 시장경제와 사유기업의 발달로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가 다원화되면서 공산당은 전통적 계급정당 형태를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단순히 노동계급 이익의 대표를 넘어 중국의 가장 폭넓은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주장을 통해, 자본가도 입당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sup>72)</sup>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길인가? 소유제의 다양한 모습으로, 혼합형 소유 형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는 예측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중국 특색을 지닌 자본주의’로 즉,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또 다른 한 형태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1949년 혁명이래 사적 소유는 착취의 근원으로 철저히 배격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 이후 개혁주의자이든 보수주의자든 ‘중국 특색’을 간직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할 때 어느 쪽에서건 누구나 중업

72) 중국 장쩌민 주석은 ‘7·1(2000년 공산당 창립 80주년) 연설’을 통해 ‘삼개대표론’을 제창했다. 그런데 자본가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면, 공산당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인민의 지지와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딜레마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덕치와 공민도덕, 당의 도덕작풍’ 즉, ‘도덕정신’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원이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채택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적 소유의 거부라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대신 종업원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곳에서는 소유 문제가 더 이상 착취의 근원이 될 수 없으며, 주식소유(shareholding)를 바라보는 인식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부정적인 사유의 한 종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정당한 ‘공유’의 한 형태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분명 중요한 변화가 틀림없으며, 중국의 실용주의적 사유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주도하에 노동자 중심의 소유권 전략으로 바로 이 종업원주식 소유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관심을 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노동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노동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여유소득도 함께 투자될 소지도 크다. 여기에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지역공동체형 소유권(community-based ownership)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주식 소유 제도의 특징을 사유제라기보다는 공동체적 소유의 독특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화 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향진기업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유가 집중되지 않고 종종 비공식적 소유권마저 혼재되어 있는 경공업 중심의 향진기업은 기업의 자산 못지 않게 지역의 연대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인 소유제도의 변화와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조’를 둘러싼 노선 갈등을 노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시장’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는 ‘시장주의’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

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유제와 사유제와의 중심-보충의 논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와 사회적 공평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이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속성에서 분배적 정의의 원리만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정치적 자유가 유보된 ‘경제적 자유주의’로 지칭되기도 하나, 현 단계에서는 성공적 경제발전 논리로 주목받고 있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의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통합의 문제와 정치개혁의 과제가 딜레마로 부각되고 있다.

### 북한: 협동적 소유와 독립채산제

남북한 이념 통합의 방향은 북한 사회주의와 남한 자본주의의 체제적 성격의 상호 침투 영역을 넓혀 나가는 데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소유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접점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북한의 소유권 제도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경제관리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소유제는 헌법상 국가소유 형태인 전인민적 소유, 사회적 소유 형태인 협동적 소유, 그리고 개인소유로 대별된다. 1998년 9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은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명문화 등이 경제관련 조항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나 특히,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와 협동단체 소유 원칙의 천명은 개정 전의 헌법 내용과 큰 변화가 없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sup>73)</sup>

북한은 협동적 소유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체제로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협동적 소유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로 여기고, 사회주의의 발달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협동적 소유의 대표적인 분야는 농업 분야에서의 협동농장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바로 이 협동농장과 같은 협동적 소유 형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동체 소유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 국가적 계획의 틀 내에서 기업소나 협동농장 등의 개별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립채산제 제도가 주목된다. 독립채산제는 물질적 유인 원리와 사회주의적 가치법칙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경제관리 방법으로 비교적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독립채산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체제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채산제는 상벌의 뚜렷한 형태로 상금제와 우대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자극하고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sup>74)</sup> 독립채산제의 단위로 공장, 기업소, 그리고 관리국 단위 또는 연합기업소 단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실시가 강조되었다.<sup>75)</sup> 이처럼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 나가면서 생

73) (북한) 헌법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74)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4. 12. 10.》, 「김일성저작집」 3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5) 김일성,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상무회의에서 한 연설, 1984. 11. 13.》, 「김일성저작집」 38권.

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합리적인 경영관리운영방법으로 제기되었다.

독립채산제는 기업적 측면에서는 '원에 의한 통제'의 강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각 기업소, 기관이 독자적으로 은행을 이용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으로써 물자구입과 판매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진다. 그리고 사업평가후 국가 몫(국가예정이익금)을 공제한 이익금은 해당 기업소의 경영상태 개선과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독립채산제의 재산운영에 있어서 기업소의 노임자금, 상금, 기업소 기금의 적립규모 등 모든 경제관리를 규정화하고 고정재산의 관리 및 이용을 제도화하며 재정의무 수행과 기업소 실적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는 등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독자적 경영활동이라는 독립채산제 본래의 의미는 거의 퇴색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적 경제원리를 도입한 과도적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독립채산제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되살릴 경우 북한식 개혁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의 이념적 토대인 공유제의 바탕 위에서 협동적 소유 형태와 더불어 협동농장이나 기업소 등의 자율경영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 해방의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립채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기대된다.

## V. 이념통합의 방향(Ⅱ)

### 1. 공동체주의의 이념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이란 본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길손 한 분이 다가와, “이 도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기에 모여 살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돈을 벌기 위해 모여 삽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 T. S. Eliot <바위> 중에서

#### 가. 공동체: 사회적 결속

인간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다.<sup>76)</sup> 이 사실을 최초로 지적한 퇴니스(Ferdinand Tönnies)는 사

---

76) 서양 사상사에서 근대적 인간의 원형은 다니엘 데포(Daniel Defoe)의 소설을 통해 창조된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이다. 최초의 근대 소설인이 작품은 중산계급의 일상적인 노동생활과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이 소설은 근대 개인주의 철학의 원류로 자리잡았으며, 로빈슨 크루소 자신은 바로 경제적 개인주의의 화신이 되었다. 근대적 인간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고도절해에서 살아가는 크루소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말하자면 근대인은 역사라는 시간관념과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과는 무관한 존재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적(類的) 존재로서의 인간을 잊어버린 크루소적 근대 개인주의적 존재는 허구적인 인간상이 아닐 수 없다.

회과학의 명저인 「공동사회와 이익사회(*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887)」를 통해 공동체의 성격과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랬던 인간 관계의 ‘유기적’인 공동체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어떠한 사람도 무수한 인간 군상 가운데 찢겨지고 개별화된 원자적 존재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인간은 본래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공동체는 개개인의 성취감을 느낄 기회, 공헌할 기회, 가치있는 존재로서 취급받을 기회 등을 제공한다.

공동체는 또한 정치의 목표다. 점점 더 빈번하게 세계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역문화, 지역환경의 공동선을 위해 설계한 정책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은 집단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나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어느 쪽에도 만족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어떠한 체제도 그것이 문화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었든, 지리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었든, 혹은 일상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되었든 사람들이 공동체의 틀 속에 편재되어 있는 연계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개인과 공동체와 시장 사이에 중첩되고 있는 도덕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소수의 손에 집중될 경우, 평범한 생활인을 포함한 대다수를 배제할 정도로 야수적이거나 비인간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사유재산은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정치 권력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시장과 재산은 모두 다루기에 따라 인간생활의 조건을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도구들이다. 근대 산업화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철학자였든 정치가였든 노동자였든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적 소유, 공적 소유 등을 둘러싸고 갈등

과 투쟁의 나날을 보냈다. 여기에는 종교계도 영원한 국외자로 될 수는 없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의 노동은 그 본성상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노동의 사회생태학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 할 것 없이 모든 체제가 안고 있는 소외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동체적 삶의 보다 순수한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sup>77)</sup>

그런데 경제적 이해없이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한때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공동체적 삶을 유지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한다. 그러한 공동체의 소멸은 서구 선진산업국가들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서서히 이루어졌다. 공동체의 소멸은 시장과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로부터 연유한다. 우리 속담에 “한 지붕 밑에 산다”고 하면 흔히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여긴다. 그렇지만 대도시의 일반적 주거형태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가운데, 비록 한 지붕아래 살더라도 아래 위층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제대로 알고 지내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서 가게 주인과 새로 이사온 이웃사람 얘기를 나누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 바로 이런 일상적인 거래관계에 연계되어 있는 인간적인 요소들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자연스런 사회적 결합체이다. 이러한 연대의식, 연속성은 사회적 통합, 사회적 관심, 그리고 문명사회의 건강성에 기여한다.

#### 나. ‘사회’의 재발견

시장적 인간관계는 모든 인간적 유대관계를 거부한다. 그러나 시장은 결코 인간의 자연적인 삶의 과정에서 발원된 생활양식이나 사회제

77) John Paul II, *Laborem Excerns* (1981).

도가 아니다. 폴라니는 ‘사회’에서 독립한 자본주의 경제가 결코 보편적인 경제가 아님을 갈파하였다. 그는 새로운 경제인류학을 개척하면서 19세기에 절정에 달했던 시장경제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그리하여 시장을 하나의 역사적 현상임을 강조하는 한편, 시장의 출현에 의한 유례없는 변화의 시대가 전개되는 과정과 함께 시장의 의한 혁명적 변화들을 밝혔다.

근대 문명의 변화 기저엔 경제과정의 전개가 놓여 있다. 폴라니는 마르크스의 도그마를 아무런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경제결정론적 방법론으로 기울어지지도 않았지만 서구 자본주의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시장의 가공할 위력에 관한 투철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악마의 맷돌’이 모든 인간을 노동자계급으로 분쇄시켰는가 라는 문제에 천착하였다.<sup>78)</sup> 악마의 맷돌 즉, 시장은 이윤 추구라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인간 욕구를 무시하고 ‘사회’를 철저히 분쇄시켜버렸다. 노동은 다른 생존활동에서 떨어져 나와 시장법칙에 종속된 결과, 모든 유기적인 생활형태는 근절되고 전혀 다른 원자적·개인주의적인 조직으로 대체되고 말았다.<sup>79)</sup> 자본가의 비인간성에 관해서는 역사적 기록이 무수히 많지만 산업혁명이 낳은 주요한 비극은 이윤추구적 자본가의 무감각과 탐욕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체제, 즉 시장경제의 점탈에 의해서 초래되었다는 데에 있다.

시장경제의 지배 아래서 인간은 사회적 결집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단어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이어야 한다. 시장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유주의 공식은 자본주의 세계질서가 구축된 이래 세계무역을 장악하는 강대국이나 패권국가의 주장에 불과하며, 국내적으로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강자의 논리일 뿐이

78) 칼 폴라니, 앞의 책, pp. 51~61.

79) 칼 폴라니, 앞의 책, p. 204.

다.<sup>80)</sup> 국내체계나 국제체계나 그 어느 것도 자동적인 조정기구에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적 제도가 경제적 기구를 유지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인가 전무인가 라는 식의 집산주의나, 완전부정의 개인주의 등 흔히 제시되는 양자택일식 대안으로 기울어질 필요는 없다. 우리 시대의 당혹과 모순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시장이 아니라 ‘사회’의 우위성을 발견하고, 상호의존적인 인간의 포괄적이며 응집력있는 결속력을 발견할 때에만 가능성이 열린다.<sup>81)</sup>

한편 시장경제 아래서는 그 목적이 이익과 번영을 창출하는 것일 뿐 평화와 자유의 창출과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도 평화도 제도화될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가 소멸되면 유례없는 자유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법률상의 자유와 현실적 자유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 폭넓어지고 더 일반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와 통제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만인을 위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을 전면 거부했던 사회주의는 자유의 왕국을 약속했지만 거꾸로 엄청난 예측과 억압만을 낳았다. 사회주의는 파산했다. 사회주의의 실패의 결과, 계획화와 통제는 자유의 부정이라는 이유로 공격받았으며 자유기업과 사적 소유가 자유의 본질이라고 선언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규제가 창출하는 자유는 비자유라고 비난 받으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정의, 자유, 복지는 노예제의 위장이라고 매도당한다. 바로 여기, 시장자유주의의 고지 위에 하이에크가 등장한

80) 시장자유주의는 경제적 부의 집중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로의 ‘trickle down’에 의한 국물효과와 같은 재분배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신자유주의는 국가간 및 국내적으로도 부국과 인구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상층 계층에 의해 제3세계와 국내의 대다수의 중하층 계층의 몫까지 갈취당하는 ‘trickle up’ 현상을 초래하였다.

81) 칼 폴라니, 앞의 책, p. 14.

다.

하이에크는 - 폴라니가 시장이라는 유토피아를 폐기함으로써 인간은 참된 '사회'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역설한 것과는 달리 - 자생적 질서로서의 자유경쟁 시장사회를 해명하고 시장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말하자면 그는 시장의 극복을 통해 유토피아적 사회를 발견하고자 했던 입장과는 대립되는 시장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존재로서, 사회와 정치제도를 형성하는 초사회적 존재(asocial creature)라는 원자적 개인주의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sup>82)</sup> 마치 기계는 술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사회는 개인이라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리로, 어떠한 집단도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적 구성 요소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사회를 일정한 목적의식 아래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이에크에게 있어 이러한 논리는 분명 인간 사회의 자연적 질서와 부합되지 않는다. 그는 사회공학적(social engineering) 합리주의라 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constructive rationalism)를 비판하면서 진화론적 합리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적인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사회 질서를 이성의 설계에 따라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사회를 설계하고 계획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sup>83)</sup> 특히 마르크스주의로 나타난 사회주의적 사고는 사회질서를 공통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조직으로 보며 이성을 남용하는 데에 근본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하이에크는 질서를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든 위계적 질서와, 스스로

82) Friedrich A. Hayek,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p. 85.

83) Friedrich A. Hayek, *Ibid.*, 서장.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행위의 산물인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로 나눈다. 전자는 특정 논리나 개인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위계적이라면, 후자는 개인들 행위의 귀결이긴 하지만 그것은 개인 차원의 행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절로 생겨난 자생적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덕률, 언어, 화폐, 시장 등이라고 한다.<sup>84)</sup> 위계적 질서는 소규모 집단이나 원시 씨족사회처럼 그 규모가 작아서 전모를 파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작은 사회에서는 가능하다. 그는 사회주의는 원시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위계적 질서를 거대하고 복잡한 근대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를 원시사회의 잔재 또는 미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자생적 질서는 복잡성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질서로, 이 자생적 질서 속에서 개개인은 질서의 구성과 진행 방향을 알지 못하며 또 알 수도 없다. 여기서는 자신만의 의도와 욕구에 따른 행위 선택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으며, 또한 어떠한 선행적 목적도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은 자유롭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개개인들의 자생적 질서의 자기구현 영역이 곧 시장이다.

시장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공동체주의는 억압 기제의 또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개인은 모든 도덕적·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개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는 부차적이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규범이자 작동 원리로 인식되었고, 나아가 범세계적인 보편 원리로 주장되었다. 그 결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이념 아래서 공동체주의는 사회주의적인 경향성을 띤 구속

84) 김균, “하이에크 자유주의론 재검토: 자생적 질서론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비판」 (풀빛, 1996) 참조.

적이고 억압적인 기제로 거부될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주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시장자본주의의 촉배의 노래 속에서 한국사회의 해체와 균열 현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대안적 모색 속에서 소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모토 아래 광범한 분야에서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본주의 이념과 시장메커니즘의 무차별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공동체주의 또는 공동체의 이념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의 수준으로까지 발전된 상태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공동체 논의는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통일의 과정에서 체제이념의 대안적 형태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연구영역이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윤리적·규범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논리로 종종 논의되어 왔으나, 공산주의(communism)와의 어원적·의미론적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남북한 이념 통합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

## 2. 공산주의 없는 공동체

인류사는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억압과 수탈체제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인간해방을 주장한 논리의 한 가운데에 항상 소유제의 철폐가 놓여 있었다.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한 진정한 유토피아로서의 사회주의 사

회의 건설을 추구했던 것이다. 사적 소유가 부정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성원은 소유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그릇된 것으로 드러났고, 오늘날 사회주의의 폐허 위에서 전사회주의 사회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보다 한층 더 노골적인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사적 소유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한 평등 이념의 구현은 실제적으로는 빈곤의 평등으로 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유욕 자체를 해방시키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소유욕의 적절한 충족을 통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 재원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평등 이념을 추구했던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사적 소유의 부정보다는, 모든 사람이 소유의 주인공이 된다면 소유 자체를 둘러싼 근원적인 갈등은 해소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Karl Marx)는 「공산당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1848)」에서 광범위하게 분산된 개인적 소유권이야말로 동등하게 만족스러운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sup>85)</sup>

당신들은 사적 소유를 철폐하려는 우리의 의도에 겁을 집어먹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9할의 사람들은 이미 사적 소유와 관계가 없다. 사적 소유가 소수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9할의 사람들이 사적 소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기에 당신들은 그것이 존재하려면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어떠한 재산권도 가지지 않아야 하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 형태의 재산권을 없애려는 우리의 의도를 비난하는 것이

---

85)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Section II: Proletarians and Communists, Marx/Engels Internet Archive (MEIA).

다.

재산권의 양보를 요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흔히 ‘점진적 사회주의(creeping socialism)’의 한 형태로 일컬어지는 제도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누진세라든지, 무료 초등교육제, 아동노동의 금지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수탈적 성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국가적·사회적 소유로 나아가는 방식보다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다면 소유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마르크스는 후자의 방식보다는 인간 이기심의 토대인 사적 소유제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어쨌든 극소수에게 집중화된 소유형태가 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근로자의 이기심과 기업의 이기심을 긴밀히 결속시키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과 같은 광범한 분산 형태를 통해 소유집중 현상을 막고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소유자 책임의 공동소유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만인(萬人)소유제 사회의 지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 가. 종업원 지주제

한 인간의 삶의 내용과 방식은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성격과 불가분적인 관련을 가진다. 사람들의 운명은 사회 즉 공동체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의 모든 인류는 지금 자본이 신적 지위를 구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투자성과를 추구하는 자본이 숭배되고 지배력을 갖게 됨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윤리적 가치나 종교 및 공동체적 가치를 대체하면서 공동선에 대한 철저한 무

관심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변해야 한다. 또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약탈 자본주의 행태는 세계자본주의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회의케 하는 수준이다.<sup>86)</sup>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는 자본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소유권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은 자기 조직적인 시스템이다.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더 많은 개개인들이 그러한 자율 설계(self-design)에 관여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소유권 리엔지니어링의 문제로 귀착된다.<sup>87)</sup>

소유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소유권 참여의 한 형태인 종업원 지주제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 조직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조직 내에서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지난날 종신 고용을 보장하는 일본의 기업 형태도 최근에는 한계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동체와는 부합되지 않는 조직이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사적 부문은 점점 더 인간 존재의 의의와 삶을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생계수단을 위한 방법이 되어왔다. 사적 부문은 물질적

---

86) 약탈자본주의의 세계적 첩병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이다. 21세기 첫 케이스로 나타난 아르헨티나의 국가파산은 IMF와 미국에게 경제주권이 빼앗긴 상태에서 회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진 아르헨티나 정부에 IMF는 초긴축재정과 증세정책을 강요한 결과 오히려 제조업 부도증가와 대량해고, 임금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 역효과만 낳아 정치·사회적 긴장을 촉발시켰고 국가기능 전체를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Washington Post*, 2002. 1. 3.(「한국일보」, 2002. 1. 5.). IMF가 아르헨티나 경제를 관리체제 아래 두는 것은, 1998년의 한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자본의 투자이익과 자본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87) 제프 게이츠, 김용범 외 옮김, 「오너쉽 솔루션: 21세기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하여」 (푸른길, 2000), p. 19.

성공과 개인적 성취감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업은 분명 공동체가 아니라 퇴니스가 명명한 ‘이익사회’이다. 그런데 바로 이 기업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는 새로운 출구를 보여준다.

미국에서 종업원 지주제 즉, 종업원주식소유제도, 연금 등에 관한 연방법률을 제정했고 현재 국제 컨설팅 회사인 게이트즈 그룹의 설립자이자 공유 자본주의 연구소(Shared Capitalism Institute) 원장인 제프 게이트즈(Jeff Gates)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대성(connectivity)’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오늘날의 정치 및 비즈니스 분야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인간적인 요소를 불어넣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유구조 개선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이 더 이상 가격 결정의 추상적인 영역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금융 및 경영 엘리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소유구조 개선은 또한 경제 영역이 우리의 후손이 필요로 하는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다 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누구나 소유와 무관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최소한 어떤 작은 분야에 있어서라도 공동 창조자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sup>88)</sup>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업원 지주제는 재건된 자본주의 형태로 특히 미국사회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1970년대 중반부터 연방과 주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종업원 지주제와 같이 보다 분산된 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도화하면서 자본집중에 따르는 폐해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전국종업원소유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1996년에 1만 개를 넘는 기업이 종업원 지주제 또는 그와 유사

88) 제프 게이트즈, 앞의 책, pp. 506~513.

한 광범위한 기반의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에 약 900만 명의 종업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9)</sup>

종업원 지주제의 이념은 모든 노동자를 자본가로 만드는 원대한 계획에서 유래한다. 사회주의의 순수 이념은 사적 소유의 철폐이자 사적 소유관계의 폐절에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는 모든 사람을 국가노동자로 전락시킨 결과가 되었다. 노동의욕의 부재, 창의성 상실, 명령경제에 의한 비자발성 등은 사적 소유관계의 철폐에 따른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거대한 전체주의적 생산체계의 톱니나 나사못과 같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이 결코 무시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자본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마치 현존하는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왜 그렇게 극소수의 자본가만 낳는가 하는 의문을 이해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집중화된 소유로부터 광범위하게 분산된 개인적인 소유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1975년 미국의 사회사업가 록펠러 3세(John D. Rockefeller III)는 소유의 분산과 종업원 지주제를 주창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의 결함 가운데 많은 부분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확대하는 방법이 발견될 경우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의 미국혁명(*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후 그의 아들 록펠러 4세는 종업원 지주제를 전폭 지지하면서 종업원 소유 형태를 ‘미국의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 for America)’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직업

---

89) 미국회계검사원의 1986년 3월 조사 당시 4,799개의 종업원 지주제도 실시 회사 수에 비하면 10년동안 두 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Statistical Profile of Employee Ownership” (Oakland: National Center for Employee Ownership, 1997.5.).

장, 공동체, 국민경제, 환경 그리고 서로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종업원 지주제는 개인적 부와 정치적 권리부여를 함께 성취할 수 있는 미국판 ‘근접(up-close) 자본주의’로 부각되었다.<sup>90)</sup>

한편 소유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경청할 만 하다. 교황 레오 13세가 1891년 산업혁명의 절정기에 ‘노동의 조건(Rerum Novarum)’을 발표한 이래 이들 문제에 관심있는 교황은 소유권의 정당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르침을 교시해왔다. 교황 요한 23세는 1961년 70회 ‘노동의 조건(Rerum Novarum)’ 기념식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원칙’을 밝혔다.

경제적 진보는 그와 걸맞은 사회적 진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생산성 증가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부 또는 재산이라는 형태의 총 자산이 아니라 그 부의 공정한 분배 및 배분인 것이다. 경험을 통해 정의에 대한 요구가 채워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 다른 것보다 특히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점진적으로 그들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공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sup>91)</sup>

교황 요한 바오로 6세는 1967년 소유권 집중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Populorum Prograssio*에서 “개인 소유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다. 그 누구도

90)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이미 종업원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으로는 United Air(종업원 수: 85,000명), Science Applications Industry(30,000명), The Parsons Corporation(5,900명), Amsted Industry(4,500명) 등이 있다. “ESOPs: How the Average Worker Fares,” (Oakland: National Center for Employee Ownership, 1990).

91) Mater et Magistra, “On Christianity and Social Progress” (1961).

남들은 부족해하지만 자신은 필요하지 않는 것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바티칸 교황청은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전 성직자에게 보내는 서한 <인간 노동에 대하여(Laborem Exercens)>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전통적인 자본주의 모두가 잘못이라고 설파했다. 그 서한에서 “소유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마르크스주의와 ‘교조적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전체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서, “가능한 한 노동을 자본의 소유권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인식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동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즉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결론을 맺었다.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카톨릭의 가르침은 계속하여 100회 ‘노동의 조건(Rerum Novarum)’ 기념식에서도 이어졌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더욱 새롭고 공정한 대안적 경제체제를 제안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실제로는 국가자본주의로 판명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로이 노동하고 자유로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시장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의 힘과 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는 시장을 필요로 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유감스럽게도 전체주의는 소외를 없애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외를 증대시키며, 기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의 의도가 왜곡되기를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 그는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때문에 자본주

의가 유일한 경제적 조직에 대한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sup>92)</sup> 이후 그는 1997년 봄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 불평등을 다시 강조하면서, 세계시장의 과도한 힘이 낳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핑계로 사람과 환경을 지나치게 착취함으로써 번성하는 제멋대로의 시장으로 인한 폐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유체계에는 균등한 기회를 창조한다고 하는 시장에 대한 신앙심이 존재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환상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아담 스미스가 오늘날 되살아난다면, 그는 분명히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미덕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18세기적 사어(死語)를 다시는 사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자유기업의 아버지인 스미스는 사적 이익의 추구가 공공의 선이 되게 만드는 활력소로서 금융시장보다는 책임성있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인간 정신을 존중하였다. 그의 경제학은 시장을 예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공공선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도덕 철학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설적인 금융가 소로스(George Soros) - 칼 포퍼의 ‘열린 사회(open society)’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그의 도덕적 실천의 일환으로 1987년 모스크바에 열린사회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 는 소련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챙겼지만 러시아에서 자리잡은 약탈적 자본주의 체제의 사악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특히, 시장 가치가 사회 전반에 침투해 들어오는 상황을 경계했다. 소로스에게 있어서 열린 사회의 적은 칼 포퍼가 규정했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더 이상 아니었다. 바로 미친 듯이 고삐 풀린 자본주의였다. 지금 자유방임

92) Centesimus Annus, “The Hundredth Year” (1991).

주의가 아무런 제약없이 심화되고 시장 가치가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우리들의 민주사회와 열린사회를 위협에 빠뜨릴까 두렵다고 하면서, 열린사회의 적은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가라고 선언했다.

열린사회는 과도한 개인주의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쟁으로 인한 협동심의 부족은 비참할 정도로 불평등과 불안정을 낳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환상이다. 자유주의는 공동선은 제한받지 않는 이기주의의 추구에 의해 최고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특정한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는 공동이익에 대한 이해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 제도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적 과시즘과 극좌적 공산주의 모두가 국가권력에 의존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제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오늘날 열린사회에 대한 위협은 그러한 전제주의적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보다 더 큰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sup>93)</sup>

오늘날 자본주의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한 인류 사회를 만드는데 훨씬 더 중요한 상호관계의 질과 양, 구성 등을 간과함으로써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그것이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의식과 문화의 꾸준한 공동발전으로 다듬어진다. 시민사회를 재건하는 것을 도우면서 공동체와 상호신뢰를 복원할 수 있는 소유권 네트워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유권 문제의 해결이 지체될수록 시민사회, 민주주의, 심지어 개인의 건강 문제까지 더욱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최근 미국의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제

93) George Soros, “The Capitalist Threat,” *Atlantic Monthly* (February 1997), p. 45.; “열린 사회로의 진보를 방해하는 자본가들의 위협,” 「신동아」 (1997. 3.).

출된 연구는 일련의 사회적·물리적 고통은 바로 바로 소유의 불평등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평등은 우정을 낳는다. 반면 불평등은 공동체 및 시민사회의 힘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미국의 경우 날로 심화되는 빈부 격차가 사망률과 보편화된 질병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건강 격차’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4)</sup> 풋넘(R. D. Putnam)은 이탈리아 지역 시민사회의 내구력에 관한 연구에서, 시민공동체의 지표가 소득분배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시민 도덕의 존재는 집단적 상호성과 결속이라는 수평적 유대와 자발적인 협조에의 의존을 환기시키는 평등주의 사회에 더욱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95)</sup> 이어 그는 만약 행복이 시민의 성공 여부를 재는 척도라고 한다면 성숙한 시민사회의 시민들은 삶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체의 특성은 가계 소득이나 종교 등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공평한 사회는 더 나은 행복을 낳는다. 사회적 연대로 층층이 엮어진 수평적인 네트워크는 규범의 작동과 시민의 참여를 원활하게 한다. 사람들도 별다른 거리낌없이 서로 신뢰하고 양보하며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 협력, 그리고 정직은 더욱 확대되고 보편화된다.<sup>96)</sup> 그러한 연구는 예를 들어, 미국의 주들에서 사람들 상호간의 신뢰 정도, 여러 도시들의 적대감의 정도, 살인과 폭력 범죄율 등은 모두 소득 불평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시켰다.

그럼에도 정치적 논쟁에서 평등의 문제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인

94) Peter T. Killburn, “Health Gap Grows, with Black Americans Trailing Whites, Studies Show,” *The New York Times*, 1998. 1. 26.

95)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109~129.

96) Robert D. Putnam, 앞의 책, pp. 109~116.

다. 불평등과 사회적 건강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한 보고서는 불평등한 사회는 건강상태가 훨씬 형편없고 더 폭력적이며 자주심이 별로 없는 반면, 평등한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증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97)</sup> 이를테면 가장 건강한 나라는 가장 부유한 선진국이 아니라 가장 평등한 국가이다. 평등한 사회가 더 건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향유하기 때문이다. 월킨슨(R. G. Wilkinson)의 연구는 환경적인 요소들과의 관련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불평등하고 허약한 사회는 사회적 응집력 역시 비정상적임을 증명하였다.<sup>98)</sup> 그는 강력한 시민공체 형성에 기여하는 동등한 인간관계를 수평적이라고 부르면서 이 동등한 관계를 허약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상명하복식 위계질서의 수직적인 주종관계와 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수직적인 사회관계를 강화시키는 불평등의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공격적으로 되고 만성적인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폭력, 사회적 응집력, 예상수명 등은 대개 소득 불평등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적 총체적 평등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진 시장민주주의 사회내에서도 불평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심각한 사회적 해체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장제일주의의 목소리만 들리고, 평등 가치는 마치 북한식 빈곤의 평등과 같이 사회적 삶의 하향 평준화로 인식하는 논리 속에 파묻혀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와 공동체의

97) Richard G. Wilkinson, “불평등은 왜 나쁜가,” 에릭 홉스봄 외, 노대명 옮김, 「제3의 길은 없다」(당대, 1999) 참조.

98) 사회적 등급이 낮을수록 흔하게 발생하는 보편화된 질병이나 사망원인 등은 바로 사회적 불평등에 원인이 있다. Richard G. Wilkinson, *Unhealthy Societies: The Afflictions of Inequality* (London: Routledge, 1996), pp. 13~28.

내적 균열의 파열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업원 지주제는 사회적 평등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경제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에 참여하고 경제적 성과의 분배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에 참가하게 되면 경영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소유권 문제야말로 경제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오직 이윤추구적 시장 논리와 사적 소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지금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창출을 가능케 하려면 기업 등 생산수단의 다양한 공동소유 기반을 확보하고 넓혀나가야 한다. 이러한 근로자 소유철학, 또는 근로자 포용개혁(worker-inclusive reform)을 통해 남북한 모두 소유패턴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나. 협동조합 공동체

공동체의 원리와 논리적 구조는 소유권 문제와 본질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사회주의는 국가소유의 비효율성과 노동소외의 결과 역사적으로 실패한 실험이 되고 말았다면, 자본주의는 소유 집중과 불평등 현상의 심화에 따른 부정의 등에 의한 내적 파열로 사회해체의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모색은 두 방향에서 추구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지배적 소유양식인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끊임없이 사회화하고 개선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적인 공동체적 소유 관계의 확대·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적 소유는 생산수단의 집단적(공동의)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써 경제적 민주주의에 근거한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범세계적으로 광범하게 존재하는 조직체로 19세기 이래 자본주의 발전사와 사회주의 흥망사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에 의한 단체로 존재해 왔으며, 사회주의체제 내에서는 국가적 소유와 국가적 경영으로 이행하는 과도적 기구로 존재해 왔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단체들의 운영 원칙이나 운영 방식은 그 경제단체의 소유권 구조에서 비롯된다. 조합원 중심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은 협동조합이 일 개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아니면 국가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합구성원들에 의해 소유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특성은 주식회사의 경우 '1주 1표'로 의결권이 부여되나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협동조합 운동을 통한 공동체 지향의 흐름은 멜니크(George R. Melnyk)에 의하면 네가지 역사적 전통에 따른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다. 즉, 자유민주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적,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전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up>99)</sup>

#### <자유민주주의적 협동조합>

자유민주주의적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와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형식상 법안화되어 있는 모든 협동조합 조직에 적용된다. 이는 19세기 영국의 로치데일 모델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서유럽 및 북미에 확산된 협동조합 조직 형태이다. 협동조합의 이념은 자본주의에 의한 이윤추구 사상을 부정하고 협동의 이념에 의해 사회를 변혁하려는 의

99) George R. Melnyk, 김기섭 옮김, 「공동체 탐구: 유토피아에서 협동조합사회로(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92) 참조.

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자발성과 가입탈퇴의 자유, 민주적 운영, 출자자에 대한 이자제한, 조합원에게 잉여금 귀속, 조합원 교육 그리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통에서 자유민주주의적 협동조합은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용인하며, 실용적인 단일기능주의의 특징은 지닌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기업의 지배적 원칙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자본주의 국가의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협동조합은 한편으로는 시장을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을 낳은 자본주의 기업이 되기보다는 자기 조직을 시장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협동조합 공동체 운동의 사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토피아적 목표와 실리적 목표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 영국과 캐나다의 자유민주주의적 협동조합의 초기 단계에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협동조합 공화국의 이상이 있었으나, 협동조합의 점진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조직은 협동조합의 대중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자본주의의 관리 및 통제에로 나아가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사적 부문에 도전해온 것은 협동조합 부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적 부문이었다. 말하자면 체제 전체를 전환시키는 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사회로부터 유리된 제3부문에 머물게 되었다. 둘째, 개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하고 협동의 촉진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 셋째, 대중적 참여와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건전한 경영 및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강조하는 모순적 측면이 있다. 넷째, 생산자의 협동조합과 소비자의 협동조합 사이의 모순이다. 협동조합이 개개의 조직 단위로 되면서 협동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일반적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고, 거대 독점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나가는 경향 속에서 소경영 부문에서 잔존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 <마르크스주의적 협동조합>

마르크스주의적(공산주의적) 협동조합은 세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것은 개념과 실천의 양 측면에서 혁명적이다. 둘째, 소비에트 체제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예와 같이, 국가에 의해 설립, 추진, 유지되어 왔다. 셋째, 공산주의적 협동조합은 중앙계획을 통한 정부관리 경제체제의 일부로 작동한다. 중앙계획을 통한 기업 관리 속에서 소경영 부문을 집단화하여 경영하는 협동조합적 형태가 일반적이다. 역사적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는 집단기업 또는 집단농장 형태로 나타났는데 구 소련의 콜호즈, 중국의 인민공사,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리제도 등을 그 주요한 형태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집단기업·집단농장 형태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모순을 드러냈다. 우선 노동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노동자는 그들이 생산한 잉여의 처분에 대한 관리 및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그 결과 모든 노동자는 국가노동자로 전락한 형태에서 자주적 결정권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은 공업화 수준이 낮은 농업국가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공업 중심의 발전논리는 전통적 소생산자로서의 농민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산주의적 이상주의적 동기 부여와 물질적 보수의 필요성간의 모순이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의 철폐라는 목표와 권위적·독재적인 현실국가의 존속 사이의 모순은 거꾸로 인간 협동의 이상적 모습을 구현하려 했던 집단기업·집단농장의 이념을 점차 퇴색시켰고 중앙집권적 국가기구만 비대해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체제는 20세기말 역사적 실험으로 귀결되었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공유제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적 사유화로 치달았다. 그러나 공동체적 소유에 기반한 협동조합적 관리 및 운영방식이 지닌 장점을 무시

할 필요는 없다.

### <사회주의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공동체 형태들 중에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나타난 것들로 자유주의적인 전통과는 달리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적 공동체 형태가 크게 주목된다. 사회주의적 협동조합 공동체 형태의 특징은 사유재산과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공동체적 전통에서처럼 고립적이지 않고 지역에 고유한 뿌리를 두고 있다. 고유한 지역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은 제한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내적 결집력을 지닌 하나의 강력한 사상과 방법을 통해 발전해왔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공동체 형태로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탄자니아의 우자마 마을, 스페인의 몬드라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각각의 강력한 사상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키부츠의 시오니즘, 우자마 마을의 반식민주의, 그리고 몬드라곤의 바스크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키부츠(Kibbutz)는 사유재산을 거부하며 토지 국유, 생산 및 생활재의 공동소유, 구성원의 전수입의 키부츠에의 귀속 등을 특징으로 한다. 키부츠의 재정에 의해서 부부단위로 주거가 할당되며 공동식사를 비롯하여 생활용품의 공동구입과 평등한 배포 등의 관리로 이루어진다.<sup>100)</sup> 아이들은 18세까지 부모와 별개의 집단생활을 하며, 자치적으로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교육받는다. 이는 마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주저 「국가론(Politheia)」에서 통치계급의 덕목으로 사유재산의 부정과 공동생활 체제를 구상했던

---

100) Ha-Zair Moshe Kerem (ed.), "Kibbutz," in *Israel Pocket Library* (Jerusalem: Keter Publishing Co., 1974), pp. 75~94.

철인(哲人)통치 국가의 이상을 방불케 한다. 키부츠 공동체 성원들은 공동체 의식과 함께 역사 속의 자신의 역할을 의식한다. 이러한 키부츠의 사회주의적 사상은 시장사회에 대한 거부며 협동적 평등주의적 인간사회 건설을 향한 제도적 실천으로,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국민경제 및 그 정치적 과정과 완전히 결합된 강력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크게 알려졌다.

탄자니아의 우자마(Ujamaa)운동은 1962년 아프리카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통한 농촌경제부흥운동으로 나타났다. 우자마란 스와힐리어로 가족애·가족관계를 의미한다. 전통사회의 상부상조 사상에 기반한 우자마 운동은 농민들의 집단부락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공동체 운동은 초기에 스스로의 힘과 역사적 전통에 의해 창조되는 평등주의적, 협동적, 비수탈적 사상 위에 건설될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다. 그럼에도 우자마의 사회주의적 공동체 운동은 토착적인 사회체제의 수립에 대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심적이고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국유화 등으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실패했다.

스페인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생산협동조합 공동체로 평가된다.<sup>101)</sup> 바스크 지방 몬드라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1956년 설립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조그마한 기업체로 시작하여 기초단위 협동조합들과 지원 협동조합들의 느슨한 연합체를 넘어서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라는 복합체를 구성하여 강력한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단위 조합들은 또한 지역을 기초로 협동조합 그룹들을 형성하여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1987년에 창설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Group Cooperative Mondragon: 1991년 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은

101) W. F. 화이트, 김성오 역,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나라사랑, 1992) 참조.

협동조합간 연대와 상호지원 및 조정은 물론 산하 그룹들을 시장과 기술이 비슷한 단위 조합들을 묶는 부문별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사회주의적 협동조합 공동체 사상은 대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두 원류에서 나온다. 이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소규모 사회,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 공동체에서는 사회주의적 생활과 생산의 전형적인 모델을 자주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모델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 외에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의 공동체 사상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사회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동체의 민족주의적 성격은 그러한 공동체 모델의 확산의 한계를 드러냈다.

#### <공동체주의적 협동조합>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적 운동은 유토피아주의 또는 강도높은 공동생활자라 불리는 협동조합 전통과 관련이 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규모 공동체로 고립지향적이며, 국가적 권위에 복종할 필요없이 소유·생산·소비의 완전한 평등주의를 지향한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흐름은 현실사회에 대한 강한 종교적 비판이나 사회적 거부감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종교적 공동체 형태로서는 성직자들의 수도원제도, 개신교 신자들의 유토피아 신앙공동체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치적 흐름 속에서는 오웬(R. Owen)의 공동체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 운동은 19세기 초반에 활발하였으나 그후 자본주의적 협동조합의 확산과 20세기 공산주의적 집단기업 형태에 의해 거의 사라졌다. 1960년대말 이후에는 반체제운동 선상에서 세속적 공동체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반전과 환경보호, 개인적 자유 추구

등의 신좌파적 공동체 운동이 일어났으나 곧 사그라들었다.<sup>102)</sup>

#### 다.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무비판적 등식화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상을 정의로운 사회질서 안에서 재조명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이론과 배분적 정의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는 경향에서 그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1980년대 이래 배분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1970년대의 정의론 대신에 공동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더욱이 1990년대 이래 심층 토론과정에 초점을 맞춘 시민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1970·80년대의 중심개념들의 통합을 모색함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서의 문제는 사실상 공동체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자아(the self)’ 즉, 개인을 규정하는 방식임을 밝혀주는데 기여하였다.

최근 자유민주주의의 변형 및 민주주의의 정당화를 모색하는 논의 과정에서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질서의 다른 특징들(예컨대 권리보호와 자유, 다원주의, 통치가능성)과 민주적 참여의 균형을 모색하는 이론집단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하는 이론집단으로 대별되었다.

---

102) 소유의 문제와 관련된 공동체 운동의 흐름과는 달리 최근 신보수주의적 입장에서 공동체주의적 공동체론을 강조하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피터 드러커 외, 이재규 옮김, 「미래의 공동체」(21세기북스, 2000) 참조.

논쟁의 기저에는 대체로 자아 및 자아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기본 가정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아를 단지 ‘이익’의 관점에서만 규정할 경우, 민주주의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집약의 도구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확장을 추구하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자아에 대한 기본가정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자유나 안전, 질서 등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통해 자기발전과 관련된 가치가 창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확장이론을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필수적이라고 할 진정한 시민권과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조건에 주목하는 민주주의론자들은 자아의 우연성과 구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공공생활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자들과 공동보조를 취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와 공동체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접근법에 있어서 구별된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배분적 정의의 관념을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개인을 공동체에 우선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자유주의의 전형은 롤스(J.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롤스의 자유주의는 통상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통상적인 자유주의적 지지에 배어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며,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 그리고 시장보다 좀더 평등주의적인 재분배에 대한 믿음으로 이는 재분배적 복지국가의 지지로 이어진다.<sup>103)</sup> 그런데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이들 두 요소 중 각각

103) 스테판 몰홀·애덤 스워프트, 김해성·조영달 옮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한울, 2001), pp. 15~19.

다른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유/공동체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 확장론자들은 민주주의 없는 통합이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적 역량부여, 대화, 상호작용의 중심성을 강조한다.<sup>104)</sup>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자아실현 및 도덕적 자기발전의 역동성은 사회정의의 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실천적 맥락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민주주의의 확장여부가 달려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차이(difference)의 조화가가능성을 모색한 최근의 토론민주주의론(deliberative democracy)에 주목하게 된다. 권리의 보편적 기초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의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사소통 윤리를 접목시킨 하버마스(J. Habermas)가 강조하는 것은 정의론의 핵심으로서의 민주적 참여와 정당화의 결정적 조건으로서의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론을 대안으로 제시한 하버마스는 그것이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적 복지(연대) 사이를 연결지음으로써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05)</sup> 물론 지금까지 이러한 논쟁에서 부각된 논점들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적 자아, 공동체, 공동선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어왔다. 그럼에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끊임없는 논쟁은 변화된 정치적·경제적 맥락 위에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적

---

104) M. Warren, "Democratic Theory and Self-Trans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 1 (March 1992), pp. 8~9.; William E. Connolly, *Identity/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 64~94.

105) D. Ingram,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Communicative Ethics for Democratic Theory," *Political Theory*, Vol. 21, No. 2 (May 1993), pp. 294~321.

지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반영한다.

###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또는 공동체 논리는 ‘집단 속에 매몰된 개인’과 ‘공동체없는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적 주체사상에 의해 개인 즉, 자이는 집단=전체 속에 매몰되어버렸다면, 남한의 시장절대주의의 신화 속에서 원자화된 개인주의에 의해 공동체는 해체되고 말았다. 북한 주체사상의 집단주의 가치관과 남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의 조화와 절충점의 모색은 바로 공동체주의 이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집단주의를 사람의 본성으로 주장하면서 개인주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언제나 갈등과 상호 견제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동지적 사랑과 상호 협조에 기초하여 보다 원만하게 실현된다고 주장한다.<sup>106)</sup>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자본주의적 산물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로 무장시키는 데 있다.<sup>107)</sup>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공산주의사상과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10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7. 15.)》, 「김정일선집」 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07) 김일성,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조선 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서 한 연설 (1971. 12. 14.)”, 「김일성저작집」 2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모든 사람이 잘먹고 잘입고 좋은 집에서 살며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우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사람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그들을 집단주의로 무장시켜야 합니다....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희생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입니다. 앞으로 직맹조직들은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직맹원들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칙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명제에서 보듯이, 전체 속에 매몰된 개인으로서의 집단주의의 극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김일성의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은 인민대중의 ‘주체적’ 자아의식의 발현과 인격적 성숙을 국가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체계 속에 묶어두는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sup>108)</sup> 이러한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은 스웨덴 사민당 당수였던 한손(Per Albin Hanson)이 복지국가의 상징적 이념으로 제시했던 ‘인민의 가정모델(1928)’을 상기시킨다. 한손은 “좋은 사회란 좋은 가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사회다.... 좋은 가정에서는 평등, 배려, 협동, 도움이 넘친다. 이것을 크게 적용하면 모든 사회적·경제적 장애의 제거를 의미한다. 현재 사회적·경제적 장애가 시민들을 기득권자와 박탈된 자, 주인과 피종속인, 부자와 빈자, 자산가와 빈한한 자, 약탈자와 피약탈자로 나누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09)</sup> ‘인민의 가정’ 모델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가족적인 우애를 기

108)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 6. 19.)》, 「김정일선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109) Anna Hedborg and Rudolf Meidner, *The Swedish Welfare State Model* (Stockholm: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1986), pp. 6~7 재인용.

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완전고용과 평등을 주된 목표로 하여 스웨덴 노동운동의 핵심적 가치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은 국가를 하나의 가정으로 전제하고, 수령과 인민대중을 아버지-자식 관계로 환치시키는 가부장적 논리라는데 특징이 있다.

주체형의 인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식을 바꾸는 인간개조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적 인간형은 사회적 공익에 헌신하는 인간상으로, 실존적 인간은 사회주의적 이념형적 인간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영역에서 경쟁의 통제기능의 상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치국가적 질서의 부재는 권력의 부패로 귀결되어 관직의 남용, 신뢰의 남용, 치밀한 감시제도 등의 강화로 인해 사회적 활력을 잃고 비인간화된 사회로 전락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이기심을 근절할 도덕적 사회의 이상은 역설적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도덕적 빈곤을 초래하면서 인간다운 사회의 가능성을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여 자유주의의 도덕적 위험이 과소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논리가 시장의 소유적 개인주의 논리에 포섭되는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무시하면서 그 논리를 오히려 규범적으로 추인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의 도덕적 불감증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주체사상의 수평화된 순응적인 인민대중의 평등관과 남한 자유주의자들의 평등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원적 평등' 이념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원적 평등 (complex equality)'은 월저(M. Walzer)가 제안한 개념으로, 이를테면 상이한 가치들은 상이한 분배 원칙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제기되었다.<sup>110)</sup> 재산이나 권력 혹은 명예

110) Michael Walzer, *Sphere of Justice* (Perseus Books, 1998), ch. I.

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특정 가치를 소유한 일부 사람들이 그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까지 모두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정의로운 상태가 아니다.

사회적·시민적 평등은 대체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평등을 전제로 하나 물질적 자원의 분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협소한 평등관을 넘어, 비물질적 가치 영역의 확보를 통한 평등 개념의 확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 VI. 결론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의 접합점이 발견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의 남북한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존의 논리와 윤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질적인 것들의 공존, 사회정의와 보편적 가치의 발견과 회복을 위한 연대의 모색, 삶의 질에 대한 질문과 다중적으로 이루어진 결합망의 창출, 경제와 정치의 민주화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 그리고 한(조선)민족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대화 등을 통한 평화적 과정 속에서 통일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각각의 체제와 이념의 변용을 통해 세계사적 변화와 보편적 가치의 수용을 지향하는 복합국가의 형태와 성격을 디자인하는 작업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 모색은 문명사적 전환에 따른 세계화의 충격과 그에 따른 사회통합의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의 '역사적' 국면에 대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남북한의 통일과정 자체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정치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은 두 방향으로의 진행을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 통일이 현존하는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이념과 체제로 통합되어 개별 국가주의의 강화와 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다양한 권력단위 안팎의 변혁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연대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은 분단의 원인 그 자체가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와 무관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적 문제와 관련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가들의 긴장과 국가주의적 대응이 강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역내 평화와 연대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한간의 확대일로에 있는 국력차이와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의 전지구적 확대 등으로 남한 주도적 통일 형태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남북한 통치엘리트와 주민들의 합의와 협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국가주의적 대응을 불러일으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곤란하며,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현존하는 특정한 국가사회의 체제와 이념 중심의 일방적 주도에 의한 통일과정은 타방에 대한 강제적 억압과 배제를 동반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엄청난 갈등과 새로운 분열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

남북한 두 국가 형태가 상당기간 존속할 것을 전제로 갈등적 대결구도의 해소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더불어,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독특한 공존체제의 모형이 필요하다. 이는 ‘한 깃발 두 국가(one flag two states)’의 상징 형태로, 민족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각각의 체제와 이념의 변용을 통해 세계사적 변화와 보편적 가치의 수용을 지향하는 복합적 정치공동체의 전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조선)민족의 민족정체성에 함축된 의미를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sup>111)</sup>

통일은 협의와 합의의 수준을 점차 높여나가는 ‘대화’ 과정을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국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에 맞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구현되는 다원주의를

111) 박명규, “근대한국국의 타자인식과 민족정체성,” 박은영 외, 「한국사회의 이론과 실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참조.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물론 단순히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경제에 대한 야경꾼이나, 통제자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건전한 다원주의와, 공격적이고 국가를 이익집단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병든’ 다원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국가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역사의 신(神)’의 손에 맡겨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의 현실적 선택은 남북한 체제(제도)의 공존과 이념적 지향성을 아우르는 복합적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다.

## 참고문헌

### 1. 국 문

- 까갈리쯔끼, 보리스. 유희석·전신화 옮김. 「근대화의 신기루」. 창작  
과비평사, 2000.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 국사편찬위원회,  
1971.
- 국순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제8호. 관  
악사, 1994.
- 케이츠, 제프. 김용범 외 옮김. 「오너쉽 솔루션: 21세기 새로운 자  
본주의를 향하여」. 푸른길, 2000.
- 기든스, 앤서니.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 김균. “하이에크 자유주의론 재검토: 자생적 질서론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비판」. 풀빛, 1996.
- 김영윤.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김일성저작집」. 3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7. 15).”
- 김형모. “중국의 농촌공업화(향진기업)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  
연구」. 제8호(1997).
- 독일사회민주당. “독일사회민주당기본강령.” 양호민 편. 「사회민주주  
의」. 종로서적, 1985.

- 드러커, 피터 외. 이재규 옮김. 「미래의 공동체」. 21세기북스, 2000.
- 등소평. 「등소평 문선(상)」. 김승일 옮김. 범우사, 1994.
- \_\_\_\_\_. 「등소평 문선(하)」.
- 라모네, 이냐시오(Ignacio Ramonet). “전체주의인 지구촌 체제에 관하여.” 「르몽드 디플로마티끄」(1997. 1.).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편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1998.
- 라이폴트, 헬무트. “경제시스템의 사회이론적 정초” 하멜, 한넬로레 편. 안병직·김호균 옮김.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계획경제」. 아카넷, 2001.
- 리처드, 개릿 아피·이대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지역간 연대를 넘어 세계적 민중연대로,” 「당대비평」. 4 (1998 여름호).
- 마르틴, 한스 페터·슈만, 하랄트. 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 물홀, 스테판·스위프트, 애덤. 김해성·조영달 옮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울, 2001.
- 박명규. “근대한국의 타자인식과 민족정체성.” 박은영 외. 「한국사회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2001.
- 삼균학회 편. 「소양선생문집(상)」. 햇불사, 1979.
- \_\_\_\_\_. 「소양선생문집(하)」.
- 셀레히트, 오토 안두순 외 공역. 「사회적 시장경제」. 비봉출판사, 1993.
- 신광영.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60년: 가능성과 한계,” 계간 「사상」. 사회과학원, 1994.

- 안병영. “신보수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의 정책비교.”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제23권 (1992).
- 양호민. “사회민주주의의 원류와 발전.” 양호민 편. 『사회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 유엔개발연구소(UNRISD). 조용환. 「별거벗은 나라들: 세계화가 남긴 것」. 한송, 1996.
- UN사회개발연구소·앤더슨, 고스타 에스핑 편.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역.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 이남주. “중국사회주의의 진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과제들.” 「이론과 실천」. 민주노동당, 2001. 8.
- 임혁백.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 「시장·국가·민주주의」. 나남출판, 1994.
- 조 민. 「한국민족주의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조호제 편역. 「NGO의 시대」. 창작과 비평사, 2000.
- 주성수.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아르케, 2000.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편역.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주운동」. 한울, 1998.
- 초소도프스키, 미셸. 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 당대, 1998.
- 플라니, 칼. 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민음사, 1991.
- 홍선휘.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한길사, 1982.
- 화이트, W. F. 김성오 역.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나라사랑, 1992.
- Hobsbawm, Eric. “신자유주의의 죽음.” 에릭 홉스봄 외. 노대명 옮김. 「제3의 길은 없다(The Third Way is Wrong)」. 당대, 1999.

- Melnyk, George R. 김기섭 옮김. 「공동체 탐구: 유토피아에서 협동조합사회로(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92.
- \_\_\_\_\_. 「공동체 탐구: 유토피아에서 협동조합사회로(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92.
- Soros, George. “The Capitalist Threat.” *Atlantic Monthly*. February 1997. “열린 사회로의 진보를 방해하는 자본가들의 위협.” 「신동아」. 1997. 3.
- Wilkinson, Richard G. “불평등은 왜 나쁜가.” 에릭 홉스봄 외. 노대명 옮김. 「제3의 길은 없다」. 당대, 1999.

## 2. 영 문

- Altvater, E. “Some Problems of State Intervention.” Holloway and Picciotto, 1978.
- Annus, Centesimus. “The Hundredth Year.” 1991.
- Berki, R. N. *Socialism*. London: Dent, 1987.
- Brenner, Robert.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No. 229 (1998).
- Connolly, William E. *Identity/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 Ecumenical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The Power of Global Finance.” *Third World Resurgence*. No. 56 (March 1995).
-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Hoare, Q. and Smith, G. Nowell(ed. and trans.).

- London: Lawrence & Wishart, 1971.
- Gray, John. *The Postcommunist Societies in Transition: A Social Market Perspective*. London: Social Market Foundation, 1994. reprinted as Chapter 5 of *Enlightment's Wake*. London: Routledge. 1995.
- Hayek, Friedrich A.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 Hedborg, Anna. and Meidner, Rudolf. *The Swedish Welfare State Model*. Stockholm: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1986.
- Ingram, D.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Communicative Ethics for Democratic Theory." *Political Theory*. Vol. 21, No. 2 (May 1993).
- Killburn, Peter T. "Health Gap Grows, with Black Americans Trailing Whites, Studies Show." *The New York Times*. 1998. 1. 26.
- Lakoff, Sanford A. *Equality in Political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Lindblom, Charles. *Politics and Markets*. New York: Basic Books, 1977.
- Mater et Magistra. "On Christianity and Social Progress." 1961.
- Moshe Kerem, Ha-Zair (ed.). "Kibbutz," in *Israel Pocket Library*. Jerusalem: Keter Publishing Co., 1974.
- Paul II, John. *Laborem Excerns*. 1981.
- Przeworski, Adam. "Neoliberal Fallacy," *Journal of*

- Democracy*. Vol. 3, No. 3 (1992).
- \_\_\_\_\_. *Sustainabl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artori, Giovanni.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 Schumpeter, J.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Allen & Unwin, 1987.
- Socialist Union. *The Ends in View, Twentieth Century Socialism* Penguin Book, 1956.
- UNDP.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1998*.
- \_\_\_\_\_.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 Wakins, Frederick Mundell. *The Age of Ideology: Political Thought, 1750 to the Pres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 Walzer, Michael. *Sphere of Justice*. Perseus Books, 1998.
- Warren, M. "Democratic Theory and Self-Trans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1 (March, 1992).
- Wilkinson, Richard G. *Unhealthy Societies: The Afflictions of Inequality*. London: Routledge, 1996.

### 3. 일본어

高橋幸八郎. 「시민혁명의 구조」. 동녘, 1983.

原秀男. 「價値相對主義法哲學の研究」. 勁草書房, 1979.

### 4. 독일어

Sänger, Fritz. *Grundsatzprogramm der SPD: Kommentar*.  
Verlag J. H. W, Diez Nachf. GmbH. 1960.

### 5. 정기간행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The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 6. 인터넷자료

[www.peopledaily.com.cn](http://www.peopledaily.com.cn)